

제5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2021. 3. 10.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1년 3월 10일(수) 10:00~19:08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3. 출석위원

도 규 상 위 원 장

* 의결 제39호 및 제62호~제67호, 보고 제5호

이 명 순 위 원

이 상 복 위 원

이 준 서 위 원

박 재 환 위 원

4. 회의경과

가. 개회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2021년도 제5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함

1) 2021년도 제3차 증권선물위원회 및 제2차 임시증권선물위원회 회의록 보고

☐ 2021년도 제3차 증권선물위원회 및 제2차 임시증권선물위원회 회의록 보고

2) 의결 및 보고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61호 『○○○○○○○○(주)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재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첫 번째 진술인 입장

- (위원) ○○○ 주장은 법원에서 1심이지만 무죄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미 다 판단을 받은 것이므로 증선위에서 동일 건을 가지고 고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금감원은 2017년은 별개의 범죄로 검찰이 기소했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추가 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 ○○○측 대리인 어떠한지?

▶ (진술인) 2017년 1분기까지만 검찰에서는 조사를 했지만 금감원은 2분기와 3분기를 추가로 더 했는데 2분기, 3분기에 추가로 나온 것은 없어 기소한 것을 보면 2분기, 3분기는 다 빠져 있음.

- (보고자) 그러니까 그 말씀은 검찰의 기소범위와 다른 별개의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만약 증선위에서 '고의'로 판단이 된다면 원칙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그것은 기존에 기소한 범죄와 겹치지 않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검찰의 공소권 없음이나 각하 처분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법리적인 주장을 한 것임.

○ (위원)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전체가 23건. 검찰이 기소해서 무죄 판결 받은 것이 12건,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것이 11건으로 금감원 측 주장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11건은 검찰이 무혐의 판단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겠다고 증선위에 올린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회사 측은 그 주장과 다른 입장임. '기타 안건(11건)'과 '비고'에 '검찰기소에서 제외'라고 쪽 적어 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해 금감원 측은 검찰이 무혐의 판단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증거를 첨부해서 올렸고 회사 측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것은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시는 것임.

▶ (진술인) 위원님 말씀이 맞음. 이 건에 대해 검찰이 확인을 했고 금감원이 공조수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래서 기소하지 않은 6건에 대해서는 기소해 봤자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음.

○ (위원) 이것이 처음부터 공조인지 협조인지를 해서 이 사건이 시작되었는데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11건과 관련하여 금감원은 그 이후에 감리를 꽤 긴 기간 동안 하여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는데 이것에 의하면 11건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정리해서 ○○○ 측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자) 이 사건을 수사했고 공판에도 관여했던 검사님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자면 “이 11건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거나 기소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처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검찰이 기소할 그 당시까지 밝혀졌던 범죄가 12건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기소를 한 것이지, 나머지 11건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음. 그리고 이 판결을 보시면 범죄 사실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님. 업무상 횡령, 업무 방해 등 워낙 많은 범죄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기소한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음.

▶ (진술인) 지금 이 회계분식과 관련된 수사가 당시에 강도가 굉장히 높았고 기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혐의가 있었다면 기소를 안 할 이유도 없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기소되었던 임원들한테 물어보지도 않은 사안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이 자리에서 따진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됨.

- (보고자) 저희 얘기는 ○○○측에서 그 11건에 대해서 검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혐의가 없다고

봐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위원) 그리고 기소한 12건과 관련이 있지만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형사벌을 다룰 때 고의범만 다루는 것이지, 과실범은 다루지 않음. 그런데 보통 금감원에서 감리를 해서 올리는 것은 ‘과실’에 해당하더라도 제재를 받고, ‘중과실’에 해당되어도 제재를 받음. 그러니까 금감원의 주장은 제재의 범위가 넓다는 것임.

- ▶ (진술인) 저는 검찰 수사 당시 약 50일간 조사를 받았던 당사자로서 금감원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안 맞는 것이 나머지 11개 중에서 이라크/필리핀 예정원가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수사한 항목으로 결국 이것이 역분식이고 고의를 입증하기 힘들어 검찰 기소에서 마지막에 제외를 하였음. 그리고 두 번째 수리온 후속군수 지원 계약 체결 前 관련원가도 제가 사실관계를 다 설명 드렸고, 한동안 문답을 진행했었지만 결국 검찰에서는 특별한 잘못이 없다면서 진술서조차도 작성하지 않았던 사안임. 그리고 11개 중에서 ‘중과실’, ‘과실’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5개가 ‘고의’로 지적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을 제외하고 그 외에 금감원에서 지적한 것을 보면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여기에서 금감원이 말하는 회사는 ○○○의 직원 5,000명 중에서 1명이라도 알았다면 그것은 인지하고 고의로 한 것이라고 판단했음. 제가 생각하기에 고의가 입증되려면 최소한 경영부서나 재무부서가 인지하면서 어떤 특정목적을 위해서 사실

을 은폐하거나 조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예를 들어 수리온 체계결빙 건과 경찰청 헬기 비상부주 건은 고의의 증빙으로 사업부서 실무자의 자료를 제시했으나 해당 자료는 상부에 보고조차도 되지 않거나 경영부서, 재무부서에 공유되지도 않은 자료였음. 그러나 금감원은 사업부서 실무자 자료가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회사가 고의로 분식을 했다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음.

- ▶ (진술인) 수리온 기술변경원가를 설명 드리겠음. 금감원은 회사의 심의자료에 정산 부인 59억 원이 되었다는 것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회사가 인지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그 자료의 내용은 본건과는 완전 별개의 사안이었음. 수리온 초도양산은 중도확정계약으로써 당시까지 발생한 비용 중에서 ○○○○○이 부인한 비용 59억 원을 말하는 것이었고, 그 비용은 이미 재무실적에도 반영된 비용이었음. 그리고 본건은 하반기에 기술변경승인된 건에 대해서 2014년에 사후정산을 하는 것이었음. 또한, 금감원은 사업부서가 ○○○○○과 주고받은 문서를 통해 인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수·발신 문서의 내용을 보니 대부분이 ‘기술변경을 승인한다.’ 일부는 ‘재검토한다.’는 내용이었음. 그런데 이러한 문서를 통해서 2014년에 사후정산에서 부인 받을 수 있는 비용을 추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사항인데 이를 회사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찰청헬기 손실충당금과 LAH 탐색개발 예상손실의 탐색개발 경우임. 이 건 같은 경우는 검찰에 기소된 차기군단급 UAV 사업의 경우와 유사한 건임. 회사는 계약가 산정에서부터 시

작해서 실무위원회, 전사심의회, 계약가 제출, 그리고 계약이 되면 사업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위임전결규정에 따라서 경영진에게 보고를 함. 그리고 적자사업일 경우에는 충당금을 설정하는 그런 단계를 거침. 이렇게 일관된 방식으로 회사는 회계처리를 해왔지만 금감원은 회사의 회계처리가 위반이라는 이유를 대면서 회사가 고의로 분식을 했다고 주장하는 건들임.

- (보고자) 일반적으로 저희가 문서라든지, 의사결정라인에 보고한 자료들 그리고 문답 등을 통해서 당시의 대표이사 또는 담당 직원들이 그런 사실을 다 인지한 상태에서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외감규정상 '고의'로 판단했던 것이었음.
- (위원) 그 12건 관련해서 금감원은 검찰에서 법원에 제출한 증거는 22건이며 그 이후 금감원이 조사·감리를 해서 확보한 증거가 88건이라는 주장을 하였음. 그런데 그 내용은 보면 회사 관계자, 문답서 이런 것이 있고 여러 서면들도 상당히 있는 편임. 그리고 검찰에 가서 회사 관계자분들이 받았던 검찰진술조서 증거를 많이 냈음.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감원에서 문답 받은 회사 관계자들 그리고 협력업체 7명임. 그다음에 ○○○○○ 2건, 이런 증거를 추가적으로 냈음. 금감원은 무죄판결이 난 12건도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 판결을 한 것이지, 금감원에서 제출한 추가증거자료에 기초하면 그 부분이 무죄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과 공조했는지?

- (보고자) 검찰이 법원에 제출했던 자료들은 저희가 제공했던 자료가 아님. 물론 공조는 했지만 각자 가지고 있는 자료는 다름.
- (위원) 금감원이 추가증거자료 관련해서 향후 입장 같은 것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지?
- (보고자) 일단, 증선위가 끝나면 관련자료들을 검찰에 전달할 예정임.
- (위원) 이 부분에 대해 회사 측은 어떠한지?
- ▶ (진술인) 증거라는 것은 크게 2가지로 구성되어 있음. 하나는 여러 관련자들의 진술증거임. 금감원의 문답서도 진술 증거이고 검찰에서 조사받은 진술조서나 피의자 심문조서도 진술증거임. 그리고 법원에서 증언하는 것도 진술증거임. 두 번째 증거는 객관적인 자료증거가 있음. 회사에서 회계업무를 하면서 작성해서 보관하고 있던 각종 자료들 그리고 회사의 협력업체들이 보관하고 있던 자료들임. 이 두 가지, 진술증거와 객관적 증거자료가 검찰에서 모두 조사됐음. 예를 들어 객관적 자료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해서 전부 제출 받았음. 그래서 그것이 고스란히 법원에 제출되었고 법원에서는 객관적 자료들에 의해서 판단한 것임. 그리고 진술증거 관련해서는 문답서 받은 것보다는 검찰에서 조사 받은 숫자가 더 적는데 그 이유는 검찰에서 문답서들을 검토한 뒤에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검찰이 조사를 하였음. 금감원에서 문답서 받은

사람을 100% 조사한 것이 아님. 마찬가지로 법원에서는 금감원 문답서에 있는 사람들과 검찰에서 조사받은 사람 중에서 변호인 측에서 증인으로 필요하다고 한 사람들만 나와서 증언을 했음. 또 하나 판결문에는 안 나오지만 이분들이 나와서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검찰에서 자신들이 말하지 않았는데 말한 것으로 잘못 기재된 부분이 엄청 많고 그것이 지엽적인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임. 검찰조서에 보면 이분들이 나와서 회계분식을 하기 위해서 조작을 했고 이것을 상급자가 지시를 했거나 상급자한테 보고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검찰조서에 기재되어 있는데 법정에 나와서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음.

○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주로 회사 관계자와 감사인 측 관계자가 조사감리대상이 되는데, 협력업체가 한 7명이고 ○○○○○이 두 사람인데 이 안건 관련해서 어떤 관련성이 있기에 관계자들을 문답했는지?

- (보고자) 회사의 주요 협력업체들로서 ○○○의 정정공시 당시에 진행을 같은 자료들을 회신하고 사업을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진행했음.

○ (위원) 협력업체와 ○○○○○ 진술은 어떤 내용들인지?

- (보고자) 일단, 주된 것을 말씀드리면 회사에서는 ○○○○○에서 착수금 지급할 때 자체 협력업체의 진척도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는 듯한 얘기를 하는 측면이 있음. 그런 것들은

○○○○○과의 문답이라든지, 따로 자료확인을 통해서 회사 주장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음. 협력업체 같은 경우에도 공사 진척된 것들만 착수금을 신청하는 것처럼 얘기할 경우 마찰이 생기면 협력업체와의 문답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통해서 회사 주장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런 자료임.

○ (위원) 회사 측은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의견인지?

▶ (진술인) 협력업체 선급금 관련해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의 주장을 금감원에서 오해하신 것 같음. ○○○가 선급금을 ○○○○○에서 받아서 협력업체에 내려 보낼 때 협력업체가 실제로 어느 정도 수행했느냐를 하나하나 따져서 내려 보냈다고 저희는 주장하지 않았음. ○○○○는 ○○○○○에서 받으면 규칙에 의해서 15일 내에 내려 보내게 되어 있어서 그 시간에 맞춰서 내려 보냈음. 원래 착수금이라는 것이 착수 당시에 바로 돈이 와야 하는데 실제로 ○○○○○ 같은 경우 돈이 한참 뒤에 내려오는 경우가 많음. 이름만 착수금이지, 한창 공사가 진척되고 있는데 그때 되어서 착수금이라는 형태로 돈이 내려오고 있음. 그리고 지금 분식회계라고 문제된 것은 결산재무제표임. 결산재무제표라는 것은 회계연도말, 매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함. 예를 들어 착수금과 중도금이 1월1일에 지급되었는데 이것이 12월31일에 들어오면 착·중도금이 아니라 이미 기존 것에 대한 완성임. 그래서 법원 판결문에도 명칭이 선급금이나 착수금이나 중도금이나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되어 있음. 제1011호 문단31호에 보면 공사를 수행한 것은 반영하면 된다고만 되어 있음. 그

런데 12월31일 기준에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100% 반영되지는 않지만 90몇% 반영이 된다, 따라서 거의 차이가 없다, 이것이 저희의 주장임.

- (위원) 저는 큰 틀에서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지적사항 중 마이너한 부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슈인 선급금 비용 관련된 질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질의를 드리겠음. 첫 번째 질문은 검찰이 기소한 12건과 기타 안건 11건 중에 6건은 검찰 쪽에서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추가자료 Note 3의 각주에 써 주셨음. 그래서 진술인 쪽에서 파악하고 있는 6건에 대해서 검찰이 인지했다는 것에 대한 판단근거는 검찰수사관이 이야기한 사실을 근거로 해서 그 6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인지를 했다고 판단하고 계신지?

▶ (진술인) 그 자료는 저희들이 수사보고서상에 정정공시 제출 목록이라고 해서 정정공시 내역을 검찰에 제시한 내용임.

- (위원) 그리고 ‘고의’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셨겠지만 법원 판단은 결국 다 고의성이 없다고 동기판단을 하고 있고 회계처리기준에 대해서는 일부 2건에 대해서는 위반했다고 하여 보류로 판단을 하고 있음. ‘고의’ 관련해서 금감원 쪽에서는 법원에서 판단하는 고의와 외감규정상 판단하는 고의가 상이하다는 이야기, 그리고 관련해서 법원에서는 고의에 대한 판단근거로 전 대표이사가 인지를 하고 지시했느냐는 것이 주요관점이라면 금감원 쪽에서는 실무자까지도 인지를 했으면 ‘고의’라고 판단하고 있음. 진술인 쪽에서 ‘고의’ 판단 근거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해 주시겠는지?

▶ (진술인) 실무자까지 기준으로 할 때는 두 가지로 갈림. 아까 회계기준 부분에 위반되었다고 판단한 부분에서는 실무자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법원에서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도 고의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임.

○ (위원) 그다음에 마이너한 건에 대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음. 금감원과 의견진술인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가 완전히 상반되어 네 건을 위주로 질의를 드리겠음. 금감원 지적사항 수정계약 매출원가 감소분에 대한 질의임. 수정계약 매출원가 감소분에 대해서 금감원은 매출액이 34억 5,000만 원이 수정계약을 통해서 감소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대리인 쪽에서도 그 매출액 감소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음. 다만, 매출원가 감소분에 대해서 금감원은 14억 2,000만 원을 적시한 반면에 진술인 쪽에서는 30억 원을 적시하셨음. 그래서 30억 원 매출원가도 함께 감소했기 때문에 계약변경으로 인한 예상손실액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시고 금감원은 30억 원이 아니라 14억 2,000만 원이기 때문에 따라서 예상손실액이 증가를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겠는지?

- (보고자) 회사 측에서 제출한 증거자료는 ○○○○○에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얘기하고 있는데 ○○○○○에 제출할 때는 차기군단급 UAV도 이익사업으로 제출했음. 정부기관에서 예산을 받을 때는 전년치의 이익을 가산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손실사항 여부와 상관없이 산출내역서가

다 이익으로 되어 있음. 따라서 지금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희는 그것을 실제 실행하고 있는 부서에서 산출한 금액을 가지고 확인을 했고 그것을 같이 문답해서 그 내용도 보유하고 있음.

▶ (진술인) 이 건은 사실과 다름. 수정계약이 34억 원 감액되었을 때를 말씀드리는 것임. 특정 품목이 초기계약 당시에는 ○○○가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이것이 수정계약 때는 이 품목에 대해서 정부가 FMS(정부보증판매)로 분류해서 ○○○한테 관급으로 제공하는 형태로 수정계약이 이루어짐. 그 품목에 대한 단가가 30억 원으로 명확하게 적혀 있고 거기에 일반관리비가 포함된 것이 34억 원임. 그리고 금감원이 주장하고 있는 실무자의 자료는 그때 수정계약에 의해서 추정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실무자가 자기가 예정원가를 추정하는 작업을 한 것 같음. 하지만 그 자료의 정확도가 떨어져서 상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을 했음. 그리고 실제로 2016년에 체계결빙시험을 이행하면서 한 3월쯤에 추가입증시험을 해야 된다는 소요가 제기되었음. 그래서 회사는 현안협의회를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예정원가를 점검했고 초과될 수 있다고 해서 2016년 1분기에 손실충당금을 설정했었음.

○ (위원) 진술인 이야기는 실무자가 자체 평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금감원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보고자) 회사가 계약원가 30억 원이 전무했다는 부분은 ○

○○○○의 수정계약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얘기하는 것임. 이 산출내역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익이 나도록 만들기 때문에 차기군단급 UAV 같은 경우에도 총계약수익을 778억 원으로 하면서 총제조원가 625억 원으로 해서 마치 150억 원 정도의 이익이 나는 사업인 것으로 ○○○○○에 제출을 했음. 따라서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마치 총예정원가가 제대로 산출된 것처럼 주장하시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 같음. 그리고 저희가 확인한 것은 2015년 7월에 수정계약이 되었는데 2015년 9월에 대표이사에 대한 보고문서로 만들어진 해당 실행부서의 목표손익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경영관리실장도 예상손실액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시인했음.

- (위원) 두 번째 질문임. 금감원 지적사항으로 LAH탐색개발 사업 예상손실 관련된 부분임. 금감원은 계약체결시점(2011년말)에 이미 손실이 예상되었으므로 2011년에 예상손실을 인식했어야 되었는데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이 지적사항인 것이고, 지금 정확하게 이 계약일이 진술인은 2011년 연말에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 계약은 2011년 10월6일에 체결되었음. 진술인한테 질의를 드리겠음. 그런데 10월6일에 계약이 체결되었으면 연말과는 개념 차이가 있는 것이고 10월6일에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도 지금 작성하신 것을 보면 계약체결 후 3개월에서 5개월 내에 사업실행계획을 수립해서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적자사업일 경우 이렇게 얘기가 나옴. 그러면 2011년 10월6일에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 손실인식이 불가한지?

▶ (진술인) 그 계약은 10월6일에 1건, 11월에 1건, 12월에 1건 그렇게 3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래서 그 3건의 계약이 다 완료된 것이 12월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인 절차에 따라서 2012년에 사업실행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충당금을 설정하는 단계를 밟게 됨.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감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도, 저희가 그 당시에 제안가 제출을 위해 심의회를 하게 되는데 그 심의회 당시에는 24억 원이었음. 그리고 2012년 경영계획을 수립하면서도 아직 실행계획이 수립 안 되었기 때문에 24억 원을 계획에 반영했었음. 그러나 금감원이 지적한 것을 보면 42억 원을 지적했음. 그래서 이 42억 원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봤더니 금감원은 회사로부터 심의회 자료, 경영계획 초안자료, 재무실적자료 등 모든 것을 다 가져갔는데 그중 가장 큰 금액이었던 경영계획 초안자료를 기준으로 42억 원을 지적한 이해할 수 없는 지적을 했음.

- (보고자) 지금 말씀하시는 자료가 조사심의회 자료인데 이것이 2011년 5월11일에 작성된 자료임. 지금 말씀하시는 예상손실 24억 원은 세전 손익기준 24억 원임. 그런데 저희가 예상손실로 기록을 할 때는 매출손실을 예상손실로 손실충당부채를 산정하기 때문에 그때 확인된 금액이 42억 원이었음. 그리고 대표이사한테 보고했다는 부분도 2012년 1월에 보고했던 문서에 명확하게 예상손실이 기록되어 있음.

○ (위원) 검찰이 기소한 건 중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음. 금감원 지적사항 자재출고조작 관련된 것임. 금감원 자료를

보면 완제기 출고실적(이하 281모드)라는 것이 있음. 281모드가 어떻게 보면 악의를 가지고 전산조작의 용어로, 생산지시서가 발행되지도 않았는데 현물이 창고에서 출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고된 것처럼 전산조작한 행위를 281모드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음. 진술인, 281모드에 대한 존재여부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진술인) 저희들이 처리하는 281모드는 정상적으로 MRP가 돌아가서 자재소요계획을 제시하면 절차를 거치게 됨. 입고, 출고의 정상적인 흐름을 거치면 P-ticket이 발행되어 정상적인 출고행위가 일어남. 그런데 MRP에 달리기 어려운 이런 품목들은 매뉴얼로 출고처리를 함. 예를 들어 저희들 공정하드웨어 같은 경우 특정제품에 달리기 어렵기 때문에 소요량을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품목들도 전부다 이 모드를 사용해서 매뉴얼로 처리를 함. 그리고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착·중도금으로 취급한 협력업체의 자료들도 이렇게 출고처리하면 281모드를 통해 출고처리함. 이것이 분식회계처리를 하기 위해서 강제로 처리되는 코드가 아니고 저희들이 정상적인 MRP흐름을 거치지 않고 매뉴얼처리하면 281이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코드임. 그것을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검찰에서는 분식으로 이 부분을 강제처리했다고 몰고 가는 것임.
-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산출고하고 실제 투입액간의 관계를 보면 예를 들어 2014년의 경우에는 거의 100배 차이가 남. 그래서 전산상으로 출고된 것이라고 지적되어 있는 것은 151억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실제 투입한 것은 1

억 5,000만 원으로 100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2015년 같은 경우에는 2배의 차이가 남. 그 건에 대해서 진술인 설명해 주시기 바람.

▶ (진술인) 저희들도 확인이 안 된 자료이기 때문에 설명드리기 곤란할 것 같음.

- (보고자) 회사가 제출해서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자료임.

○ (위원) 해외 LRU 관련된 것으로 이것이 일반품이나, 특수제품이나에 대한 구분을 하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데 지금 진술인 측 얘기는 0.4%, 0.5% 밖에 안 되니까 일반과 특수에 대한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인데 금감원은 이 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보고자) 회사 측에서 저희 쪽에 LRU전용률에 대해서 열람하기 위해 저희 원을 방문하셨는데 서로 백데이터를 보여주기 위해서 열람하기로 했는데 회사 측에서는 1,468건의 대체건수에 대해서 어떻게 산출했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설명안 해 주셨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마 입고된 이후에 출고된 건수만 산정을 하신 것 같음.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 발주가 되었는지, 어떻게 입고가 되어 출고되었는지에 대한 증빙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자료로 판단을 내렸음.

○ (위원) 확인할 수 없는 자료라고 하는데, 진술인 답변해 주시기 바람.

▶ (진술인) 일단, 1,468건은 법원이 ○○○에 사실조회를 통해서 사업 간 대체가 일어난 건수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내용임. 국내 LRU에 대한 사업 간 대체 사실조회 회신에서 1,468건이 나왔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대체비율은 2013년부터 2017년 1분기까지 해당되는 국내 LRU의 전체 출고건수 대비 사업 간 대체된 것을 비교한 것이 지금 현재 0.3%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금감원에서 이야기한 발주된 이후에 예를 들어 입고될 때 일부 대체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회사 측이 확인을 해보니까 시스템상 일단 발주가 되면 입고될 때까지는 대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어제 확인했음.

- (보고자)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입고된 사업에 대한 발주를 확인할 수 있음. 그 발주된 사항에 대해서 다른 사업으로 입고되는 것도 저희가 확인이 됐음. 따라서 그러한 자료들을 저희가 제출할 수 있음.

○ (위원) 선급금 관련 추가자료 확보를 통해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금감원의 추가자료가 무엇인지?

- (보고자) 객관적인 내부문서를 말씀드리는 것임.

○ (위원) 가장 큰 이슈가 되는 선급금 원가 인식 관련, 대금지급기준과 협력업체 진행을 그리고 입고기준 이렇게 3개가 있는데 2017년 그 정정하기 전까지는 대금지급기준을 썼고, 그

래서 대금지급기준과 입고기준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 수정 이후에는 협력업체 진행율과 입고기준을 비교하고 있는데 지금 3개가 귀속되어 있음. 귀속되어서 그것을 발라내서 2017년에 정정하기 전에, 그러면 과연 대금지급기준이 맞느냐 입고기준이 맞느냐 하는 것부터 논의를 하도록 하겠음. 진술인, 대금지급기준과 선급금 그리고 입고기준 중에 어떤 것이 회계기준에 맞는지?

▶ (진술인) 그중에 한다면 대금지급기준이 맞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원칙중심으로 변경이 되었음. 원칙중심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나면 큰 원칙만을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사용하라는 규칙을 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각 회사들은 그 원칙에만 맞으면 회사의 여러 실정을 조합해서 구체적인 회계처리방식을 각자 정할 수 있음. 그러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는 그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로 판가름하는 것이 타당함.

○ (위원) 그렇다면 K-IFRS 제1011호 문단31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원가로 인식하지 말아야 될 사항으로 수행될 공사에 대해서 하도급자에게 선급한 금액은 원가로 인식하지 말게 되어 있음. 그런데 인식을 수행될 공사에 대해서도 선급금을 지급하셨음. 진술인,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 (진술인) 그 내용 자체는 맞음. 그런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면 그 방법이 회계처리를 할 때 자료를 습득

하든지, 비용이나 여러 노력이 필요함. 그래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래서 최선이라면 하도급 협력업체로부터 그 진행율을 그대로 받아서 사용하는 하도급업체, 협력업체 진행율 기준이 최선인데 저희가 채택한 대금지급기준은 거의 그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와 있음. 반면에 검찰이 주장하는 입고기준은 굉장히 큰 격차가 있음. 따라서 법원도 입고기준에 따라서는 도저히 정당한 회계기준이 맞다고 볼 수 없다고 평가한 것임.

-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2016년말 기준으로 ○○○○○과 ○○○○○ 같은 경우에는 진행된 사업이 전혀 없음. 하나도 없는데 착수금을 지급했음. 그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람. 그것은 진행되고 진행될 것에 대한 구분을 떠나서 아예 시작도 안 한 것에 대해서 착수금을 지급했음. 그것도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 (진술인) 진행율이 “0”이라는 자료는 저희들이 본 적 없는 것 같음.

- (위원) 미지급금이 없는 협력업체에 대해서 선급금을 지급을 하고 오히려 미지급금이 있는 곳은 선급금을 지급을 안했음.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금감원은 실적향상을 위해서 미지급금이 없는 곳에는 안 하고 있는 곳에 다시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진술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자세히 나와 있음.

○ (위원) 진술인 측은 협력업체 진행을 산정에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 (진술인) 저희들은 그렇다고 생각함.

○ (위원) 그런데 금감원 자료를 보면 2017년 8월에 했고 12월에 보니까 오히려 협력업체 진행율이 결과적으로 감소된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

▶ (진술인) 자료의 신뢰 여부는 세부사항 하나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임. 그래서 사후에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면 그것은 정정공시를 해서 수정하면 되는 것임. 물론 그것이 전체적으로 완전히 잘못됐을 경우에는 신뢰할 수 없다고 봐야 되는데 2017년말에 약간 바뀌었다는 것은 정정공시 될 수준으로 판단이 됨.

○ (위원) 그런데 검증 자체가 불가하다는 이야기도 있음.

▶ (진술인) 협력업체 진행율을 받았을 당시에 일부 협력업체가 오류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발견을 했음. 발견하고 그 부분을 2017년말에 저희들이 다시 진행율 누적으로 다시 받아서 재조정을 한 부분이 있음. 그 부분도 저희들이 회사에서 진행율을 알아서 조정을 했음.

○ (위원) 그 진행율을 업체한테 전달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지? 업체한테 진행율을 아예 ○○○쪽에서 정해

서 전달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지?

▶ (진술인) 그렇게 한 적이 없음.

- (위원) 계약변경 예상손실과 LAH탐색개발 부분인데, 회사의 견해와 금감원의 견해가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정공시를 하지 않았는지?

▶ (진술인) 하지 않았음.

- (위원) 정정공시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회사는 여전히 의견이 갈리는데 이것은 팩트에 대해서 측면이 다른 것 같음. 정정공시한 것이 있고 안 한 것이 있는데, 정정공시 안 한 것은 회사가 맞다고 그 입장을 유지하는 것인지?

▶ (진술인) 정정공시를 할 시점에는 저희들이 검찰과 금감원이 인지를 해서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회사가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정정공시를 한 부분이고 그 정정공시를 할 당시에 사실은 금감원과 검찰이 지적한 정정공시 안에서도 저희들이 수긍하지 않은 내용도 있는데 검찰, 금감원의 회유, 저희들이 느낄 때는 압박과 이런 부분 때문에 정정공시를 안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었음.

-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시 자체를 안 한 것인지? 회사의 표현에 의하면 회유와 압박이 있었는데도 정정공시를 안 하신 것인지?

▶ (진술인) 이때 당시에는 금감원, 검찰, 저희들도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부분들임. 그때 저희들은 회계처리를 금감원과 검찰 이슈사항들에 대해서만 계속 관리를 하고 조사를 했고, 이 부분은 정정공시 이후에 다시 일어났다고 했음.

○ (위원) 그 이후에 이슈가 되어서 아직 정정공시는 안 하고 있다고 얘기해야 되는지? 일단, 재무제표 정정이 됐는지?

▶ (진술인) 정정공시는 안 한 부분임.

○ (위원) 아무튼 금감원 견해대로 재무제표 정정은 안하신 것인지?

▶ (진술인) 그 당시에 금감원이 지적을 한 건이 아님.

○ (위원) 그러면 금감원은 2017년 이후에 추가적으로 지적을 하신 것인지?

- (보고자) 맞음.

○ (위원) 회사는 계속 대금지급기준을 협력업체 진행율로 해서 정정공시를 했고 당시에 금감원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는 듯한 표현이 여기저기 나오는데 맞는지?

▶ (진술인) 저희들이 감리받는 과정에서 검찰과 금감원은 계속 저희들이 낸 진행율 기준이 맞다고 제시를 했음.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정정공시하면 1단계 감경이 된다고 계속 회사에 권고를 계속했음.

○ (위원) 그 당시 금감원의 입장은 어땠는지?

- (보고자) 저희는 협력업체 진척도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님. 문단31에서는 공사수행 정도를 반영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지, 저희는 그때 당시에 협력업체 진척도 기준 금액이 어느 정도 인지에 대해서도 파악한 적이 없었고 그전에 협력업체로부터 공문을 어떻게 받았는지, 이것을 어떻게 검증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저희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협력업체 진척도 기준으로 하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음.

▶ (진술인) 회사에서 반론을 하겠음. 사실 그 건은 다른 분이 진행율 기준을 적용하라고 말씀을 하였고, 그것은 협력업체에서 진행율 받는 기준이다, 그때 다 공유가 되었던 건임. 그리고 정정공시를 한 내용은 정정공시 하기 전에 금감원 감리팀장님께 “이렇게 정정공시를 하는 것이 문제가 없습니까?”라고 저희들이 상의도 하고 협의도 드렸음. 그리고 1-10의 경우에는 정정공시를 하는 순간에 역분식이 일어나니 금감원의 팀장님이 “이것은 검찰수사 기조와 다르니까 회사가 검찰에 보고까지 하세요.”라고 한 건들임. 그런데 선급금에 대한 진행율을 금감원이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사전에 “이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협의를 하고 정정공시도 “그러면 선급금을 진행기준으로 가면 회사가 1999년도부터 수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불가능한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금감원으로부터 “그러면 5년만 끊으세요.”라고 해서 2013년부터 정정공시 한 날짜도 금감원과 협의해서 한 건임.

○ (위원) 금감원,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자)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취지는 협력업체 진척도 기준으로 저희가 지적하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 그것은 ○○○측에서 구체적으로 금감원과 상의한 부분까지 말씀을 하셨으니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기소와 다른 부분이 2011년, 2012년 그리고 2017년 2분기, 3분기, 4분기가 추가로 있는데 이것은 별개의 건일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음. 그러니까 첫 번째 기간이 다르다는 이슈가 있고, 두 번째 상당 부분 추가증거가 있다고 금감원에서 얘기를 하고 추가적인 목록까지 제출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 증거를 보고 이것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 증거인지를 가늠하기가 어려운 사항임. 어쨌든 금감원이 증선위 하면서 저희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금감원의 모든 증거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지?

- (보고자) 상당부분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 회사의 대금지급기준에 대해 과거 감사인(○○회계법인, ○○○회계법인)들이 05년, 07년 후속적으로 대금지급기준에 대한 문제제기를 회사에 했다고 하고 거기에 연속되는 자료가 나오고 회사에서는 실제적으로 2007년의 경우에는 가상의 실적자료를 협조요청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했다는 얘기가 나옴. 그래서 금감원은 실제 ○○○의 대금지급기준이 실제 진행율과 많은 괴리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로써 얘기를 하고 있음.

- ▶ (진술인) 검찰도 그 부분을 똑같이 주장하면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음. 그런데 사실관계를 보면 2번에 걸쳐서 회계법인들이 문제제기한 것은 맞음. 거기에 대해 하도급 진행기준으로 대금지급기준을 했다는 특수성을 설명 드리고 결과치가 그와 유사하다는 두 가지 측면을 회계법인에 설명했고 두 회계법인이 동의를 해서 계속해서 넘어갔던 것임.
- (위원) 금감원 자료에 보면 착·중도금의 성격을 얘기하고 있고, 선급금 원가 인식에 대한 보충자료, 여기에 아주 구체적으로 회사의 선급금과 진행기준금액 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금감원 여기에서 진행기준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금액인지?
- (보고자) 정정공시 이후에 회사가 저희에게 제출했던 협력업체에서 회신한 진행을 금액임.
- (위원) 저는 이 부분이 약간 넌센스인 듯한 느낌을 가지는데 협력업체 진행을 부인하면서 일단 협력업체 진행을 사용하고 있음. 아무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주)의 경우에는 대금지급액이 2016년에 6억 6,000만 원이나 지급했는데 진행기준은 “0”으로 되어 있음. 여기 거론되는 업체들이 몇 개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해서 회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 (진술인) 사실 협력업체 진행을 쓰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대금지급기준을 쓰는 가정에서는 사실 선급금의 일부가 협력업체 진행과 차이 나는 부분은 있을 수밖에 없음.

- (위원) 그러면 이것이 역의 경우도 나와 있는지? 지금 회사는 평균적으로 유사하다고 주장하시는 것이니까 역의 경우도 나와 있는지?

▶ (진술인) 그런 경우가 많음.

- (위원) 금감원이 이렇게 자료를 제시할 것이 아니라 균형적으로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역의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회사를 선도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만 된 자료를 제시하지 말고 다른 쪽 방향의 자료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 (보고자) 저희가 제시한 것은 절대금액이 아니라 잘못되었다는 것을 예시로 보여드리는 것임.

▶ (진술인) 세 개의 회사, 세 개의 선급금을 보면 차이가 나는 것이 있을 수 있음. 재판과정에서도 그것이 쟁점이 되었음. 그래서 저희들이 연도별로 제시를 했음. 전사업을 모아서 연도별로 제시했고 거기에 따르면 당연히 돈은 항상 더 적게 받음. ○○○○○이 돈을 주면서 더 많이 주는 경우는 극히 드문 예임. 그 부분의 자료는 다 제출했음.

- (위원) 그다음 금감원 자료를 보면 ‘착·중도금 회계처리 회계기준 위반가능성의 인식’이라고 나와 있음. 그래서 그 당시 前대표이사는 재무실장, 경영지원본부장 이렇게 쭉 오면서 선급금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고 그렇기 때문에 선급금 회계처리에 대

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음.

- ▶ (진술인) 前대표이사는 그런 직책에 있으면서 실무자들로부터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임.
- (위원) 금감원 감리 및 검찰 조서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의 진술조서가 있음. 금감원에서는 검찰 진술 말고 금감원에서 한 진술조서가 증거자료로 제출되지 않았고 이것도 증거로써 상당한 증거력이 있다는 말씀을 하심. 이 진술조서는 본인들이 서명을 하신 것이고, 뒤에 가서 보니 일부 또 번복하기도 하는 것 같음.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 (진술인) 금감원 문답서에 어떤 내용인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검찰에서 한 진술조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됨.
- (보고자) 제가 직접 문답을 하지는 않았지만 문답서 내용을 보고 검찰 조서 열람한 사항과 비교를 해 봤는데 ○○○께서 검찰에서는 12건에 대해서 거의 시인하는 방식으로 진술 하셨는데 저희 금감원에 진술할 때는 그중 본인이 봤을 때 분식회계라고 판단한 사항들만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래서 검찰에서 진술한 태도와 금감원에서 진술한 부분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문답 자체를 ○○○의 서울사무소에서 문답을 했음. 금감원 내에서 문답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자유롭게 임의문답을 받고 서명까지 다 받은 상황임.

- (위원) 그다음 금감원 자료를 보면 2016년에 자체자금으로 선급이 일어나는데 KFX 체계개발사업을 위해서 자체자금 지급을 이렇게 무리하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 ▶ (진술인) 우선, 자체자금 지급은 법적으로 ○○○○○ 착·중도금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음. 두 번째 자체자금 지급한 사유가 ○○○○○에 정부 예산이 모든 사업에 걸쳐서 모든 시기에 걸쳐 예산이 부족하였음.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업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 예산 투입할 수 밖에 없었음.
- (위원) 이것은 판결문에도 충분히 나온 얘기이기도 하고, 그런데 계속 '조기집행'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옴. 금감원은 그 조기집행이 분식을 하기 위한 대응이라고 하는데 그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 (진술인) 저희들이 경영계획을 수립할 때 일단은 각 월 별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계획보다 한 달이나 빠르면 일단 회사에서 경영회의나 이런 부분들을 조기집행이라는 용어로 쓰고, 계약이 조금 지연되면 추진지연이라든지, 이런 용어로 사용함. 그런 형태의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음.
- (위원) 회사는 자체자금으로 자금을 집행할 때 협력업체와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있는지? 최소한 협력업체에서 청구서를 보낼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겠음.

▶ (진술인) 협력업체에 대금지급기준은 계약기준임. 착·중도금 지급할 때는 우리가 협력업체와 계약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업체에 착·중도금이 지급된 바가 없음. 단지, 계약이 됐는데 정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으로 대금을 집행하게 되었고, 중요한 사례로는 2015년에 수리온 협력업체 58개의 업체가 전부 다 건의서, 탄원서를 제출했음.

○ (위원) 지금 계약기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약서에 지급되어야 될 날짜가 있는지? ○○○○○에서 받아서 하는 착·중도금은 절차가 딱 정립이 되어 있는지?

▶ (진술인) 그러함.

○ (위원) 그러면 자체자금의 경우에는 절차가 있느냐는 것임. 정부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동일한 절차로 자체자금이 착·중도금 지급하듯이 既집행분, 그다음에 그것을 고려해서 청구한다든가 하는 확인절차가 동일하게 있는지?

▶ (진술인) ○○○○○의 방위산업 착·중도금 지급규칙 제3조에 보면 업체의 예산 부족 시에 ○○○자체자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했음. 두 번째로 우리 내부적으로는 업체와 계약이 되면 당연히 업체한테 협상을 통해서 선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위원) 회계분식 배경은 ‘①CEO 연임을 도모하고, ②임원

성과평가를 높게 유지하고, ③경영실적을 과시하려 한 것임’ 이렇게 3가지가 크게 언급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회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 (진술인) 검찰에서도 분식회계의 목적을 그 3가지로 주장을 했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매출을 늘리고 그에 따라 영업이익을 늘리고 그에 따라 회사가 성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제1목표라고 되어 있음. 그런데 예를 들어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역분식임. 실제로 하도급업체 진행 기준을 보면 매출이 더 적게 되어 있음. 그런 주장이 맞지가 않음. 그다음에 사소하게 임원의 성과급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액수가 아주 미미함. 그래서 그 부분이 나중에 배임죄로 따로 기소가 되었는데 역시 무죄가 났음.
- (위원) 그다음에 ‘고의회계분식 증빙자료’라고 해서 위반동기를 ‘고의’로 판단할 수 있는 추가증빙자료가 있는데 내부분서로 2013년부터 2017년에 걸쳐 경영회의록, 분기별 전망 등이 쭉 나와 있고 그 뒤에 목표달성을 위한 추가 만회 대책, ‘매출손익은 자금조기집행에 따른 개선으로 착시현상이었음. 타사업의 선투입으로 만회하고 있는 상황. 매출손익은 선매출로 간신히 유지. 매출은 선매출, 기계약 사업으로 바뀌고 가고 있음’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옴. 2016년 경영회의록을 보면 매출영업이익은 KFX 엔진 선급금 조기지급, 조기집행 이런 말이 또 나오고 있음. 이런 부분이 분식의 내용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서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람.

- ▶ (진술인) 경영회의록에 나오는 ‘조기’라는 단어는 통상 당초의 계약보다 조기라는 의미로 사용을 했음. 업체와 계약도 안 됐는데 돈을 미리 내보내 주는 것은 ○○○같은 대기업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경영행위라고 보고 있음.
- (위원) 그다음 입고기준과 관련해서 금감원에서는 이 입고기준이 순차적으로 납품되는 것이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납품되어서 ○○○가 협력업체의 투입원가를 파악하여 공사진행율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한다는 말을 하고 있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 (진술인) 저희가 법원에서 어떻게 변론을 했느냐 하면 K-IFRS가 원칙만 하고 룰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도급 업체의 진행기준, 대금기준, 입고기준 모두 다 가능하다. 모두 다 회계기준에 위반되지 않는다. 문제는 어느기준이 가장 실질을 더 잘 반영하느냐의 여부임. 이 3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잘 반영한 것은 하도급 업체의 진행기준이고, 두 번째로 잘 반영한 것은 ○○○가 채택한 대금지급기준이고, 세 번째로 검찰에서 한 입고기준은 실제로 반영이 너무 많이 떨어진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을 했음.
- (위원) 협력업체 진행율 기준은 측정에 문제가 있음. 그런데 입고기준이 정말로 순차적으로 납품이 된다면 이것은 측정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있는 것임.
- ▶ (진술인) 국제회계기준에는 ‘합리적 추정’이라는 표현을 쓰

고 있고 합리적 추정이라 하면 100% 완전한 추정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음.

- (위원) 특히, LRU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납품이 되는지? Lead Time 2년, 3년 이렇게 해서 엔진이라면 일시에 납품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 순차적 납품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순차적 납품이 정말로 순차적으로 되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

▶ (진술인) 협력업체 LRU 납품은 순차적인 것보다 정부 예산과 회사 일정, 정부 전략화 소요시기에 맞추어서 납품을 하게 되어 있음. 그래서 저희들이 양산 같은 경우 120대라면 이 부분이 전략화시기에 따라서 대략 납품 일정이 ○○○○○과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전략에 따라서 들어오는 것임.

- (위원) 이것에 대해서 금감원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보고자) 일단, 분할납품과 관련해서 저희가 협력업체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협력업체는 기본적으로 다 분할납품 계약을 체결함. 예를 들어 수리온 2차 양산 같은 경우에는 66대를 납품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각 호기별로 부품을 납품해야 되는 시기가 정해져 있음. 따라서 협력업체는 최소 66건을 수리온 2차 양산과 관련해서 납품을 해야 되는 것임. 따라서 그런 항목들이 점차적으로 많을수록 연중 계속 납품 된다고 저희는 본 것임.

- (위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특수제작품이 과연 무엇이나, 금감원에서는 체계개발단계의 특수제작품에 한해서 협력업체 작업진행에 따른 투입원가를 반영할 수 있고 양산단계의 LRU는 일반품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출고기준이 타당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체계개발 뿐만 아니라 양산도 이것이 별도 제작품이기 때문에 여전히 협력업체 진행율을 적용이라고 얘기하고 있음. 금감원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보고자) 체계개발산업은 하나의 부품을 표준화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어느 정도 시간이 있는데 그다음에 양산단계로 오면 거의 비슷한 형상으로 됨.
- ▶ (진술인) 지금 금감원에서는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항공기를 만드는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 밖에 없음. 그 제작품이 별도 제작이 아니고 공용으로 될 수 없는 부분임. 그리고 업체에서 만드는 Lead Time이 보통 8~28개월 정도, 적게는 1년에서 3년까지 걸리는 품목들인데 그것이 공용품이라면 아무 때라도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협력업체를 둔 것도 국산화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국산화까지 하라고 해서 일정을 관리하고 진행을 하는 부분들임.
- (보고자) 대금지급기준과 입고기준의 차이는 뭐냐면 대금지급기준은 협력업체에 대해서 돈이 나가는 것만 관리한다는 것이고 입고기준이라는 것은 부품별로 공정에 따라서 산출된 것들이 관리가 되기 때문에 공정의 수행 정도를 객관적

이고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임.

▶ (진술인) 그것은 금감원에서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음. 저희들은 착·중도금 지급기준으로 수익인식을 한 것이 맞음. 그리고 수익인식 기준을 하다보면 업체에서 납품한 것을 저희들이 정산을 안 해 주면 수익이 이중으로 됨. 그래서 입고가 되면 수정분개를 함. 그러면 대금지불보다 입고금액이 많으면 역으로 된 것을 왜 말씀 안 하시냐고 하는데 어느 시점 되면 대금 지불한 것보다도 실물들이 금액적으로 더 크게 들어옴. 그러면 회계기준상으로 돈 지급한 것보다 실물이 많이 들어오면 실물을 잡고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것임. 그것이 기준인데 자꾸 금감원은 오해를 해서 말씀을 하심.

○ (위원) ○○○○○에서 착·중도금 지급을 할 때 어떻게 관리를 해서 대금을 지급하는지? 기본적으로 방산업체들은 원가에 마진을 가산해서 계약을 체결하는지?

▶ (진술인) 맞음.

○ (위원) 그러면 그것에 기초해서 ○○○○○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제3자 간에 진행도 안됐는데 돈 줄 이유가 없음.

▶ (진술인)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과의 계약서상에 납품일정이나 품의서라든지 또는 협력업체 선정 일정이라든지 모든 일정이 다 명시가 되어 있음.

그 일정에 따라서 지급될 예산도 계약서 작성 시점부터 다 계획이 되어 있음. 저희들은 그 납품일정, 생산일정, 개발일정에 따라서 계약서상에 나타난 대로 일을 진행하고 있고 또 그에 따른 예산도 반드시 그렇게 집행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간혹 예산의 부족 시점에는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부득이 방위산업 착·중도금 지급규칙 제3조에 따라서 자체자금으로 일부 집행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의 승인을 받아서 후불로 받는 경우가 많음. 그리고 저희들이 착·중도금 지급 프로세스는 그 ○○○○○과의 계약에 따라 사업일정과 당초 실행예산에 따라서 예산이 성립이 되면 저희는 협력업체로부터 그에 따라서 협력업체하고 협상할 때부터 일어났던 모든 지급일정과 계약서 일정대로 착·중도금 지급 신청을 요청하고 그 착·중도금이 나오면 그에 따라 지급하게 되는 절차임.

- (위원) 그런데 금감원 자료에 보면 선품보 없이도 선급이 많이 됐음. 지금 여러 가지로 양쪽의 의견이 다 있음. 그다음에 회계법인에서 대금지급기준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Progress Billing이라고 용인을 한 가장 큰 기초가 저는 ○○○○○의 착·중도금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체자금이 많이 집행이 되다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자세하게 규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이 없었고, 금감원과 ○○○의 자체자금 집행추정치에 차이가 많음. 금감원은 6,520억 원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자체자금이 됐다고 되어 있고 회사는 1,500억 원~2,000억 원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보고자) 첫 번째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협력업체만 가지고 계산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니까 수입재료에 대한 지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빠져 있는 상태로 판단됨.
- (위원) 왜 ○○社를 회사는 자체자금이 아닌 것으로 분류하고 금감원은 ○○社의 경우에도 자체자금이고 이것이 어떤 공개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 (보고자) ○○社를 언급한 이유는 회사가 선금신청을 하면 내용이 국내재료비, 수입재료비, 노무비 이렇게 구분됨. ○○社 같은 경우에는 수입재료비로 신청을 하게 됨. 거기에 ○○社로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수입재료에 해당하는 해외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것은 다 수입재료비로 신청을 하게 됨. 저희는 수입재료비 신청액이 없는데 ○○社에 지급한 지급액을 자체자금이라고 추정했음.
- (위원) 이 부분에 대해 ○○○측에서도 말씀해 주시겠는지?
- ▶ (진술인) 지금 ○○社를 계속 자체자금으로 언급을 하시는데 ○○社에 지급하는 돈은 기본적으로 ○○○○○에서 빠져나온 착·중도금 대상이 아님. 그래서 해외협력업체에 저희들이 선금금으로 지급일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돈이지, ○○○○○에서 착·중도금을 받아와서 지급하는 대상이 아님.
- (위원) 중요한 것은 대금지급을 통해서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하는 것임. 이 대금지급이 객관적으로 절차가 수

립이 되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음.

▶ (진술인) ○○社도 계약할 때부터 지급일정이 계약일로 되어 있어 그 일정에 따라 지급을 한 것임.

○ (위원) 보통 이것은 lead time이 얼마나 걸리는지?

▶ (진술인) 통상적으로 한 30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원) 금감원, 지금 회사의 설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보고자) ○○社가 납품하는 항목이 딱 하나 있는 것은 아님. 제일 큰 항목이 아마 10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 되는 품목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lead time이 긴 것으로 알고 있음. 다른 품목들은 그 정도 lead time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음.

▶ (진술인) 지금 금감원이 주장하는 자체자금 6,500억 원도 금감원이 실지급액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 문답할 때 파악을 했음. 특정 연도에 들어온 실질을 가지고 그 지급율을 연도 별로 환산한 금액인지 추정금액인지, 실제 저희들이 지급한 금액을 계산한 금액이 아님.

- (보고자) 선급금 지급액은 명확하게 지급액을 보고 판단한 것이고 신청서에서 나타나는 신청금액을 다 대조해서 계산한 것임.

○ (위원) 해외 LRU 출고기준에 대해서도 전산조작이 있음. 원래 최초 정정공시 하기 전에 해외 LRU는 출고기준이었는지? 그중 일부만 전산조작을 통해서 입고하자마자 실제로 생산에 투입도 안 되었는데 출고로 한 것인지? 그러면 해외 LRU 중에서 그 당시 채택했던 원칙에 근거해서 출고기준으로 처리된 것도 있고 전산조작을 해서 입고기준으로 처리된 것도 있고,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인지?

▶ (진술인) 제가 검찰에서도 일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회계처리기준에서 보면 해외 부분도 진행율로 하면 입고기준에서 진행을 할 수 있었지만 그때 당시 내부회계기준으로는 출고기준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회사가 실수를 한 부분임.

○ (위원) 예상손실액을 언제쯤 알 수 있느냐, 회사는 여러 가지 절차를 쫓 말씀하셨음. 회사 현업부서에서 작성되어 있는 아직 미완성 형태의 추정원가를 가지고 손실로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회사는 그 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말씀하는데, 왜 이것이 다툼이 되는지? 회사는 그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람.

▶ (진술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실행원가 계획을 잡는 부분이 회사에 확고하게 설정이 되어 있음. 예를 들어 적자사업 수주를 했을 경우에도 이 사업을 계약하고 수주한 이후에 실질을 회사가 수행하면 원가절감을 얼마나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최적을 만들 수 있는지를 가지고 수주 이후에 각 생산과 사업관리가 다 모여서 그 부분들을 전부

다 재점검함. 그 절차를 거쳐서 그것이 확정되는 시점에 재무는 손실이 나오면 거기에서 나오는 손실을 전액 손실충당금으로 설정하고 그 예정원가에 의해서 이율을 가지고 저희들이 회계처리함. 그 절차는 전 사업이 동일하고 금감원에 계속 이 이야기를 설명 드렸음. 그런데 금감원은 처음에 사업수주를 하거나 담당자들이 수주한 자료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회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는 것임.

- (위원) 그리고 회사는 협력업체 진행율을 사용하고 있는데 금감원에서는 그 협력업체 진행율의 개수가 굉장히 많음. 협력업체의 개수가 대략 몇 개 정도 되는지?

▶ (진술인) 협력업체 개수는 사업마다 조금 다른데 한 50개 정도 됨.

- (위원) 그러면 전체 원가계산 단위 프로젝트 개수는 몇 개가 되는지?

▶ (진술인) 각 사업별로 20개 정도임.

- (위원) 금감원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보고자) 회사가 정정공시한 프로젝트가 30개 정도 있고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수리온 2차 양산 같은 경우 협력업체가 한 1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 (진술인) 저희 협력업체는 100개 내지 200개가 될 수도 있지만 적용하는 협력업체는 착·중도금 관련된 업체만 함.

▷ 첫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두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 (진술인)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의 입장이 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에 바뀐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도 계속 동일했던 것이냐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2018년 금감원 답변서와 2020년 감리위 제출자료를 각각 답변번호와 페이지를 인용해서 문구를 표시해 드렸음. 저희 입장은 초기부터 계속 똑같았음. 그 다음 세계적 방산업체의 협력업체 진척도 반영방법에 대해서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하셨고 그 내용을 정리해 드린 것임. 해외 업체를 저희가 직접 접촉해서 협력업체 원가반영 방법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면 최선이었으나 협력업체들이 특수성의 보안문제 등 민감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듣고 할 수 없었음. 그래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해외 사례를 조사했음. 첫 번째는 방산업체들이 공시하는 Annual Report를 분석한 방법임. Annual Report에 명확하게 언급된 내용은 대부분 협력업체의 비용을 입고시점이 아닌 발생시점에 반영하고 있다고 기술되어 있음. 즉, 방산업체의 원가 구성항목을 열거하면서 Material(재료비)를 별도로 언급하고 또한 subcontractors' cost(협력업체 비용)을 구분해서 기재된 것은 협력업체로부터 입고된 자재 품목 이외에 협력업체 발생비용을 반영한다는 것으로 이는 Vender progress를 반영

하는 것으로 판단됨. 표를 보시면 글로벌 방산순위 1위부터 11위까지 있음. 이 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2위인 ◇◇와 11위인 ◆◆◆가 ○○○에서 감사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 두 개 업체의 감사인을 직접 커뮤니케이션했음. 일정을 고려하여 회사가 내부적으로 진척도 추정하는 방식으로 보았다고 답변을 했음. 만약 빌링이 진척도와 유사하면 빌링방식도 쓸 수 있다고 답변했음. 두 번째 ◇◇◇의 답변은 첫 번째로 진척도 수령방식을 쓰고 있고 두 번째로 일반적으로 협력업체와의 업무관계상 협력업체로 하여금 작업진척도에 따라 빌링하도록 하고, 발주처는 그 빌링자료를 원가에 반영하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했음. 저희가 말한 입고기준은 실무상 본적이 없다고 명확하게 언급해 주었음. 그리고 저희는 방산업체의 양대산맥인 유럽의 Aero-Defense Industry 전문가와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했음. 미국에서 온 답변을 요약하여 진척도 수령방식과 협력업체 납품일정을 고려하여 회사가 내부적으로 진척도를 추정하는 방식을 참고하도록 보내 드렸음. 그러자 영국의 전문가는 “US에서 답변한 방식이 현실적으로 합리적이다.”라고 답변을 해 왔고 독일의 전문가는 “진척도 수령방식이 적절하다.”고 답변을 했음. 결국은 회계정책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을 적용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자기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그리고 고민해서 쓰는 방법이 결국 이 세 가지로 결론이 나 있음. 그래서 결론을 적시를 했는데 ‘협력업체의 진척도를 반영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하는 것과 미국의 “진척도 수령방식”과 “빌링방식”, “납기를 고려하여 자체 추정하는 방식” 이렇게 세 가지로 귀결되

며, 유럽은 “진척도 수령방식”이 가장 적정하다고 언급을
 했음. 결론적으로는 진척도 수령방식이 가장 합리적인 대
 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임. 세 번째는 증선위원님께서
 Progress Billing과 대금지급방식이 어떻게 다르냐고 질문
 을 하셨고 저희가 그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음.
 저희는 초도감사 때부터 ○○○○○○과의 계약서 그리고
 자료검토, 대금집행과정에 대한 인터뷰를 등을 통해서 프
 로세스를 이해했고 회사가 적용한 회계정책이 실무에서
 충분히 적용가능한 회계정책이라고 판단하여 수용한 것임.
 ○○○가 쓴 대금지급방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저희가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인데 첫 번째는 협력업체에 대한 대
 금지급은 ○○○○○○과의 계약서에 이미 지정이 되어 있고
 ○○○는 주기적으로 대금신청시에 해결업체에 既완료분
 (예 6개월) 및 향후 사용예정분(예 1개월)에 대한 자료를
 청구해서 그 내용을 ○○○○○○에 청구하면 ○○○○○○이
 그대로 수용하거나 일부는 삭감해서 지급을 했음. 그래서
 향후분에 대한 지급은 많지 않았음. 그다음에 회사가 자금
 을 집행하는 시점에는 일반적으로 1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향후 사용예정분도 既완료분으로 바뀜.
 그리고 청구주기가 보통 6개월이고 연중에 고루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12월말 결산시점에 보면 실제로 향후 예정
 분도 다 완료된 경우가 대부분임. 회사가 쓰는 것이 실제
 로 협력업체 진척된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희 감리
 기간 중에 있는 가장 큰 프로젝트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
 음. 분석대상 프로젝트는 2013년, 2014년, 2015년 그때 당
 시 협력업체 착·중도금 사용계획서를 받았음. ‘착수금 및
 중도금 사용계획서’ ‘수령액’에는 이미 수령한 금액을

표시하는 것이고 두 번째 ‘사용실적제출액’에는 이미 기 제출했다가 이번에 진행한 내용이 되어 있고 ‘신청대상액’에는 기사용액과 사용계획으로 되어 있음. 결국 신청대상액 중에 이미 사용한 금액, 이 표 합계란을 보시면 사용액이 108억 원이 있고 사용계획은 10억 원이 있어서 이번에 110억 원을 신청한다고 되어 있음. 그리고 저희는 사용실적을 12월말 결산시점으로 맞추기 위해서 2014년 3월에 신청한 것을 매월 균등하게 발생했다는 것을 추정해서 넣었음. 그리고 신청액은 원본 그대로 향후 사용분도 신청에서 사용계획도 포함해서 그대로 인용했고 협력업체는 한 10여개사임. 그 결과 중간에 있는 ‘협력업체 누적진척도 대비 대금지급 後行분석: Progress Billing 사례’ 표를 보시면 2013년에 누적 대금지급액이 42,142백만원이고 누적진척도는 45,825백만원이었음. 즉, 진척이 3,683백만원 정도 더 진행되고 대금지급은 이것에 일반적으로 후행하였음. 2014년 자료와 비교해 보면 누적 대금지급액이 112,819백만원인데 실제 진척도는 129,486백만원으로 16,667백만원 이미 진척도가 앞서 있고 대금지급이 후행하는 표임. 그리고 하단 표를 보시면 헬기 총 66회를 2017년까지 납품하여야 하는 ○○○○○과의 계약서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인데 실제로 연부엑스케줄은 2017년 이후인 2018년에도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정부 예산이 부족해서 항상 늦는다는 것을 표시해 놓은 것임. 금감원이 주장하는 입고기준까지도 저희가 세 가지를 모두 다 비교해 보았음. 그래서 앞선 프로젝트를 이 세 가지로 비교해 봤음. 합계를 보면 누적 대금지급액이 42,142백만원이고, 누적수행실적은 45,825백만원인데 입고금액은

0 원임. 금감원 기준으로 하면 매출도 0이고 원가도 0인 것이 되어 진척도를 반영할 수 없다는 것임. 2014년말로 봐도 누적 대금지급액이 112,819백만원이고 업계실적은 129,486백만원으로 16,667백만원의 차이가 나지만 입고금액은 76,541백만원으로 차이가 커 입고기준은 사실상 업체의 진척도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저희의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음.

- ▶ (진술인) 저는 협력업체로부터 회신된 진행율이 신뢰성 있다고 판단한 근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음. 일단, 저희는 기본적으로 협력업체가 신뢰성 있는 진행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금감원에서는 소급해서 구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지만 과거 기간에 대해서도 신뢰성 있는 자료의 측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음. 이와 관련된 내용은 기존에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어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음. 저희가 신뢰성 있다고 판단했던 근거는 다음과 같음. 일단, 협력업체로부터 온 공문이 정당한 승인권자, 이 경우는 대부분 거래처의 대표이사나 담당임원, 부서장 등을 통했고 공문을 통해서 수령을 했음. 이것이 직접조회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진행율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했음. 그다음에 진행율이 적절하게 재무제표에 반영됐는지 확인했음. 그 신청서에 보면 업체가 얼마만큼의 업무를 진행했는지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음. 그래서 저희가 협력업체에서 받은 자료에 대해 표본을 통해서 이번에 보낸 자료와 기존 자료의 일관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 검토를 했음. 그다음에 현업의 책임자와 인터뷰를 통

해서 자료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이나 분석적 검토를 통해서 특이사항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청했음.수리온 사업이나 KUH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세부 데이터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경비 등으로 구분 되어서 연도별로 세부 데이터 자료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의 신뢰성에 대해 저희는 충분히 신뢰할만 하다고 판단했었음. 다음으로 기타 중과실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음. 앞에 차기군단급 무인기(UAV)는 2012년 12월28일에 계약된 것으로 매출과 비용이 전혀 인식되지 않아 회사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정원가는 확정시점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됨. 금감원에서는 이사회 의사록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는 개발투자로 언급되어 있고 이 품목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템도 개발투자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손실사업이라고 추정하기는 무리가 있었다고 보고 있음. 엔진 교체비용 관련해서 감사 당시에는 의제외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회사도 제시하지 않았고 심지어 회사의 경리팀도 인지를 못했음. 그리고 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상 판단의 여지가 있다고 한 부분임. 금감원에서 2014년을 '중과실'로 했는데 사실 저희가 2014년에 동 사항을 최초 인지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순자산에 영향이 없고 비용이 언제 시점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의 여지가 있고 비교 재무제표를 수정할 만큼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건에 대해서 '중과실'로 판단하는 것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기타 중과실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회계감사는 기본적으로 표본추출에 따른 표본감사로 인한 한계가 있음. 그래서 감사

절차시에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건은 아예 표본추출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고 세부 검토대상에서 제외됨. 이와 관련해서 T-50 PBL사업의 계약 前 원가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왜 2013년에 비용처리하지 않았는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이 부분은 금액이 한 40억 원 정도로 재공품 전체금액이 1,900억 원 정도 됨. 그중에 2.2%라서 저희가 특별히 표본검사에서는 나오지 않았고 일반적인 재고자산 절차나 아니면 순실현가치 측정 테스트 조서에서도 표본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음. 또한, 회사는 이 부분이 2013년 결산 당시에는 정산 가능한 비용이었다고 판단한 부분도 있었다는 점 같이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소형무장 헬기 탐색개발 사업의 예상손실 관련해서 2011년과 2012년을 '중과실'로 판단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2011년말에 계약된 사업임. 매출액이 3억 원인 사업으로 금액성이 굉장히 낮은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2011년도에는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금액적 기성고(既成高) 파일 내 올라가지 않은 이 금액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감사절차를 통해서 확인하기는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람. 하자보수 충당금은 매년 이렇게 정교화해 가는 과정을 거쳤음. 그중에서 기타 부분에 대해서 하셨는데 '중과실' 조치금액이 2억 원, 2억 원, 7억 원으로 저희 전체 양에서 차지하는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회사가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었던 점 고려 부탁드립니다. 다음 FA-50 훈련체계 제작 사업의 계약수익 변동 미반영은 방산업체의 특징으로써 정산이 발생하게 됨. 사업은 2014년에 완료됐는데 정산은 2015년에 일어났음. 그 정산자료가 2015년 3월에 발생했

고 현업팀에서 했지만 사실 재무팀도 몰랐던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을 감사팀이 파악해서 하기가 매우 어려웠고 저희가 그 절차를 취했음에도 알기 어려웠다는 점을 다시 강조 드리고 싶음. 그다음에 공사손실충당금 전입액을 매출액에서 차감한 회계처리가 있음. 이것은 저희가 과거 2009년 감사 당시에 지체상금이라는 것이 있고 공사손실충당금이 있는데 각각 다르게 처리했던 것을 회사 담당자가 그 이후에 생기다보니까 오류를 한 것 같음. 사실 매출을 일반적으로 회사가 과대계상하지, 과소계상 하려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의 중점 검토대상이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단순 계정 재분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음. 해외수출사업 관련 중개수수료도 결론적으로 오류 금액이 4억 원에서 1~2억 원 정도로 굉장히 미미한 금액들임.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오류가 발견되어서 회사한테 정정하라고 했지만 일부 담당자의 실수가 있었던 부분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중과실' 조치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요청 드리겠음.

- (위원) 대금지급기준이 IFRS 제1011호상 합법한 처리기준인지?
- ▶ (진술인) 기준서에서는 협력업체의 진척도를 반영하라는 문구만 31번 문단에 있고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영하라는 말은 없음.
- (위원) 그런데 수행될 공사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음.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수행하지도 않은 공사에 대해 선급금을 지급한 것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

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진술인) 따라서 저희는 협력업체의 진척도를 어떻게 추정해서 반영할 것인가, 이것은 사실 회사의 회계정책이고 이 회계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다 수치적으로 검증을 하지는 않고 있음.
- (위원) 그것은 협력업체 진행율이 아니고 전 단계인 대금지급 기준인지?
- ▶ (진술인) 그래서 저희가 오늘 설명 드렸던 것이 착수금 및 중도금 사용계획서라는 것이 있음. 이를 보면 수리온 2차 같은 경우는 5차에 걸쳐서 신청을 했는데 신청할 때마다 회사가 어떤 것을 기존에 사용해 왔는지, 그다음에 향후에 사용하겠다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음. 저희가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지난번에 협력업체 진행율을 가지고 말씀드렸더니 위원님들께서 협력업체 진행율 말고 실제 업체에서 사용한 금액을 가지고 보면 어떻게 됐느냐고 해서 저희가 그 데이터를 준비했음. 그래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착·중도금 신청서를 다 받아서 실제 연말자 기준으로 보면 실제 업체에서 수행한 부분과 저희가 대금으로 지급한 부분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해 봤더니 아까 설명 드렸던 것처럼 거의 대부분이 실제로 대금지급한 것보다 업체에서 집행한 부분이 훨씬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위원) 지금 주장하시는 것이 Progress Billing 방법이 대금지급 방법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 주장이 성립되려면 기본적으로 Progress Billing 방식이 실질을 반영하고 있다는 전제가 되어야 맞는 것임. 여기에서 원천적으로 Progress Billing 방식이 맞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것임. 그래서 Progress Billing 방식에 대해 세계적인 방산업체들의 자료를 굉장히 많이 업데이트 하셨는데 자료 준비하신 것을 보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Progress Billing 방식에 대한 'their performance'에 대해서 'internal estimate'라는 것이 있음. 그래서 뭔가의 모니터링, 뭔가를 측정하는 내부방식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회계법인에서 그러한 방식들을 요청하고 취하셨느냐? 굉장히 많이 예를 들어서 쓰셨던 ◇◇◇社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feedback을 하는 기능이 있어 분기별로 완성도를 평가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 그래서 그 Progress Billing 방식에 대한 모니터링, check-up, feedback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서 그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로 하는데 ○○회계법인에서는 Progress Billing 방식에 대한 신뢰성 담보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 ▶ (진술인)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은 저희가 보기에 답변의 또 다른 방법을 이야기 한 것임. 전체 납품일정을 고려해서 자체적으로 추정해서 쓰는 방법을 얘기한 것이고 그다음에 빌링방식을 이야기 했음. 그래서 Internal estimate는 다른 방법을 한 것 같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 저희가 어떤 업무를 했느냐고 하시면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착·중도금 신청서를 저희가 자료비교해서 실제로 업체의 진척도를 확인할 수 있었음.

○ (위원) ○○회계법인에서 직접 협력업체가 제출한 작업진행도를 파악한 적이 있으신지?

▶ (진술인) 저희가 2009년부터 감사를 했음. 초기에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계약서를 검토하고 관련자료들을 받고 인터뷰를 하거나 해서 그 업무를 수행했음. 대금지급 기준이라고 하니까 오해할 수 있는데 저희가 착·중도금 지급기준의 절차를 말씀드린 이유는 그 지급을 신청할 때 업체에서 항상 앞에서 나온 것처럼 본인들이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추가금을 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처음 계약금, 중도금 이렇게 계속 2차, 3차 나갈 때는 그런 것들이 진척을 반영해서 청구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과 많이 다름. 그래서 이 업의 특성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런 신청의 방식이 Progress Billing을 반영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던 것임.

○ (위원)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횡수나 진행율이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라고 해서 쪽 적으셨는데 여기에 적시한 주요 협력업체 중 한쪽에서 내용을 쪽 받아 보니까 실제 Progress Billing 방식에 의해서 기술한 금액과 실제 본인들이 결산한 금액에 상당한 큰 차이가 발생을 함. 그러면 협력업체 진행율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있음. 솔직히 회계사님들이 생각하기에 협력업체가 제출한 진행율이 정말 신뢰할 만 하다고 생각하는지?

▶ (진술인)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함.

○ (위원) 누적진척도는 협력업체 진행율과 다른 것인지?

▶ (진술인) 다른 것임. 이 누적진척도는 '사용실적제출액'이라는 것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위원) 착·중도금을 받기 위해서 내는 서류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지?

▶ (진술인) 맞음. 그리고 이 '사용실적제출액'은 그냥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내역까지 첨부해서 하는 것임.

○ (위원) 금감원은 대금지급기준해서 ○○○○○ 예산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보고자) 협력업체와의 대금지급은 협력업체와 ○○○간의 연부액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가 협력업체의 소요를 파악하는데 한 달이 걸린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지금 지급한 사례를 보면 신청하고 20일 안에 다 지급이 되었음. 따라서 소요를 파악하는데 한 달 걸린다는 얘기는 이론적인 얘기임. 이미 연부액계약에 따라서 지급되기 때문에 소요를 파악할 필요가 없는 것임.

▶ (진술인) 참고로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가 그 대금을 ○○○○○한테 지급 받으면 협력업체 지급분을 7일인가 며칠 이내에 협력업체에 전부다 보내 주어야 함. ○○○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임.

- ▶ (진술인) 그리고 저희가 이 실적을 뽑을 때는 그 업체에서 이 경우에는 2013년 12월에 신청하면 2013년 11월까지 사용한 금액을 제출하고 저희가 그 제출한 금액을 받아서 작성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 자체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음.
- (위원) ○○은 이 ‘사용실적제출액’이 실제로 진척도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 ▶ (진술인) 그러함.
- (위원) 그런데 금감원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임.
- (보고자) 중도금 신청서로 파악이 됨. 중도금을 신청할 때는 착수금 신청액 중에서 사용실적을 받아서 사용실적에 착수금 신청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도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음. 그것이 ○○○○○○에 규정하고 있는 착·중도금 지급 규칙에 나와 있는 사항임.
- ▶ (진술인) 금감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금을 할 때 저희가 지금까지 받은 돈에서 얼마를 썼는지를 여기에 적도록 되어 있음. 그래서 사용실적제출액이라는 것이 이미 받은 것들 중에서 돈을 얼마 썼는지를 적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신청대상에 보면 ‘중도금전환액’이라는 것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돈 받았지만 실제 저희가 집행을 더했기 때문에 이번에 청구는 했지만 이미 집행된 부분이 ‘중도금전환액’이라는 것에 들어가 있음. 그래서 실제로 이 돈을

청구할 당시에 업체가 진행된 금액은 사용실적제출액과 중도금전환액까지는 이미 집행이 되어 있는 그 돈이라고 보시면 됨.

- (보고자) 지금 중도금이라고 하셨는데 그 중도금이 언제 지급한 중도금인지도 불분명함. 감사인이 제출한 부분은 착수금이라고 되어 있는 신청서에 보면 3차 신청서까지도 착수금이라고 기록된 사업들이 있고 그 이후에 중도금이라고 표현되는 사업들이 여러 건이 존재함. 따라서 중도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네 번째 착수금을 지급한 부분인지, 여섯 번째 지급한 부분인지 이런 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감사인이 파악 못한 것 같음.

- ▶ (진술인)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2013년 12월에 처음 제출한 건임. ‘사용실적제출액’에 기제출액이라는 금액은 공란으로 되어 있음. 왜냐하면 한 번도 대금을 수령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기(既)받은 돈 중에 쓴 돈은 없는 것이고 이번에 저희가 전체 쓴 금액이 108억 원이라고 청구를 하고 있는 것임.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119억 원을 청구할 것인데 이중에 108억 원은 앞에 있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임. 내가 지금 110억 원을 청구하기는 하지만 그중 110억 원은 이미 쓴 돈이고 향후에 쓸 돈은 11억 정도만 쓰겠다고 청구를 한 건임. 그러니까 착·중도금 신청서는 차수 별로 계속 이런 식으로 누계관리가 되서 업체에서 받았던 금액들을 쫓 관리하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음.

- (보고자) 일단, 기본적으로 감사인들이 Progress Billing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와서 마치 대금지급기준이 Progress Billing과 연관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음. 기본적으로 Progress Billing이라는 것은 기성고(既成高) 신청을 하고 발주업체가 그것을 확인하고 그 금액을 지급하든지 아니면 특정 부채가 생기는 것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회사 입장에서든 본인들이 해당 기간 동안에 한 번도 검증한 적이 없고 파악한 적 없다고 하는데 감사인들이 회사로부터 무슨 자료를 받아서 했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음.
- (위원) ‘사용실적제출액’이나 ‘중도금 전환액’은 어쨌든 서식으로 사용실적을 적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검증절차는 없었다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는지?
- (보고자) 맞음.
- (위원) ○○회계법인은 그것에 동의하는지?
- ▶ (진술인) 사업부에서 이 자료를 청구하는 사람들이, 이 뒤에 관련된 자료들이 쭉 첨부됨. 사용금액이 얼마이고 향후 사용예정은 얼마인지 하는 자료를 쭉 올려서, 저희가 정부로부터 돈을 받을 때 그냥 받지는 못함.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저희가 협력업체에 별도의 부서를 두고 사업관리를 계속 하고 있음.
-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체자금 지급 절차도 이것과 똑같은지?

▶ (진술인) 그렇지 않음.

○ (위원) ○○회계법인은 2015년, 2016년에 자체자금이 유난히 많다는 것을 인지하셨는지?

▶ (진술인) 자체자금지급 그 부분은 인지하지 못했음.

○ (위원) 금감원, 착·중도금과 자체자금의 그 절차는 다른지?

- (보고자) 다른 절차임. ○○○○○은 ○○○가 자체자금을 지급할 때 이것을 확인하는 절차나 검증하고 승인하는 절차가 없다고 회신한 바 있음. 자체자금을 신청할 때는 이러한 착수금 신청이나 이런 절차들이 부재함.

▶ (진술인) 제가 알기로 자체자금은 협력업체들이 워낙 진척도가 많은데 정부예산부족으로 대금을 받지 못하니까 일단 ○○○에서 먼저 자기자금을 업체한테 먼저 보내주고 나중에 ○○○○○한테 받는 절차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원)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인 진술이고 2015년과 2016년에는 자체자금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확인을 하셨어야 함. 감사절차를 함에 있어서 추가 절차를 한 것이 있는지?

▶ (진술인) 발주처에서 시공업체한테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 그런데 저희가 협력업체한테 자체자금을 집행한 것이 회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음. 꼭 우리의 원발주자인 ○○○○○한테 받은 자금만 써야 되는

것은 아님. 업체가 진행을 했다면 저희 자금을 써서라도 대금을 주어야 되고 그것을 진척도에 반영한 것은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함.

○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진척도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셨어야 함. 지금 ○○회계법인에서 기타 중과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중요성 이하 금액도 있고 계약이 연납이 되었는데 회사에서 자료를 제시 안 하니까 알 수 없었다고 했는데 전부다 ‘중과실’로 판단하셨는지?

- (보고자) 구체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음. 예를 들어 차기군단급 무인기(UAV) 같은 경우 감사인이 답변할 때는 계약서를 공시된 자료로 확인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12월28일자로 전자공시가 되어 있음.

○ (위원) 여기에 ○○회계법인에서 얘기한 것에 대해 금감원이 ‘중과실’로 판단한 배경이 있을 것 아닌지? 추후에 설명해 주고 필요하다면 그것에 대해 ○○회계법인에 사실확인을 하겠음.

▶ (진술인) 아까 자체자금에 대해서 확인을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회계정책으로 수립하다 보니 회사에서 지급하는 돈의 성격, 이것이 ○○○○○으로부터 받은 것과 자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구분을 못했던 것은 맞지만 이것이 아주 예외적인 사항들, 2016년에 KFX이라는 굉장히 큰 사업이 시작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슈가 발생했던 것이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거의 유사하다는 점 하나와 입고기준으로 갔을 때, 원래 처음에 금감

원이 지적하고자 했던 부분은 대금을 지급했는데 업무가 수행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이 아니라 대금도 쫓고 업무도 수행되었던 부분까지도 다 회계오류고 전부다 잘못된 것이라고 조치금액으로 하는 것은 감사인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만약에 회사가 '입고'로 가지고 와서 저희한테 감사의견을 달라고 했으면 못 드렸을 것 같음.

▷ 두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보류하는 것에 동의함

⇒ 보류*함.

* 만장일치로 보류를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13시29분 정회)

▷ 증선위원장 입장함(증선위원장이 회의주재)

(15시08분 속개)

- (위원장) 의결안건 제39호를 논의할 순서이나, 금융위와 금감원에 증선위에서 요청드릴 사항이 있음. 그 요청사항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 검토를 하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람. 불공정거래조사 또는 회계감리가 장기화될 경우 혐의자와 관련해서 기업들이 장기간 불확실한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그동안 쭉 제기되어 왔음. 많은 조사·감리를 금감원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지만 사안이 점점 조직화되고 복잡화되고, 또 조사 개시부터 제재까지 여러 단계를 거침에 따라 일부 사건은 처리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것도 있음. 조사와 감리의 신속한 처리는 혐의자와 관련해서 기업의 불확실한 상황을 조기에 해소하고 제재의 적시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매우 큼. 그동안 저희들이 조사와 감리의 신속한 진행을 저해하는 관행은 없었는지, 또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에 대해 살펴봐 주시기 바람. 예를 들자면, 조사와 감리의 처리기한을 설정하고 무혐의로 종결되는 조사의 경우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저희가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임. 금융위와 금감원은 서로 협의해서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고 그 개선방안을 증선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람.

□ 의결안건 제39호 『□□□□□□□□(주)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이 누구에게 대규모 전환사채 평가오류에 대한 것을 알려줬고, 그 알린 사실에 대해서 A씨에게 전달한 동사 관계자가 누구인지?

- (보고자) 마지막 회계법인과 기존부터 계속 손실반영의 규모에 대해서 논의를 해오다가 협의가 잘되지 않는 상태였는데 4월17일부터 회계감사인 쪽의 대표와 □□□□□□□□(주)의 대표가 만나 협의를 하여 보고한 것임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62호 『(주)○○○○○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등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저는 주식을 매매할 때 단순 단타매매 위주로 많이 하는 사람임. 매수라는 것은 내가 매수를 하고 싶어도 계좌에 돈이 있어야 매수주문이 나갈 수 있는 것임. 일명 이것을 증거금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계좌에 1,000~3,000만 원 밖에 없어 허매수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임. 단순 단타매매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 1,000원에 1만주를 주문 넣었다고 가정했을 때 1만주가 다 맞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1,000원에 5,000주만 맞으면 저는 1,000원에 매수가 그대로 5,000주가 있고 저처럼 단타매매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1,030원에 매도주문을 거는 것임. 그러면 제 주문은 1,030원에 5,000주가 있고 1,000원에 그대로 5,000주도 있는 것임. 그런데 거기에서 나중에 건 매도주문 1,030원이 팔렸을 때 최초에 있는 그 5,000주를 5분 만에 매수 취소하면 그것이 허매수가 되는 것임. 그리고 여기에 보면 4개의 계좌를 동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4개의 계좌를 동원한 것이 전혀 아님. 착오매매를 하다 보면, 매도가 매

수를 반대로 하고 만약 567원을 777원으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한국거래소 프로그램이 그것을 읽어서 다음날 통상적으로 증권사에서 전화가 와 이렇게 착오매매하면 안 된다고 통보되는데 그것이 3개월 동안 4번이 되면 5일간 매수금지가 되기 때문에 보통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증권사에서 2번 전화 오면 본인이 실수를 했든 안 했든 간에 나중에 4번이 되면 5일간 매수금지가 되는 것이 신경 쓰이기 때문에 그 증권사 계좌는 3개월 동안 놔두고 다른 증권사 계좌를 만들게 되는 것임. 그래서 제 의사와 상관없이 계좌수가 많아진 것이지, 무엇을 동원한 것이 전혀 아님.

○ (위원) 허수매수가 무엇인지?

- (보고자) 매수주문 가격이 매수 6~10호가에 해당하고 매수주문수량이 10단위 매수호가잔량의 10% 이상 주문은 허수매수로 보고 있음.

○ (위원) 두 번째로 가장매매는 무엇인지?

- (보고자) 지금 혐의자의 매매양태를 보면 많은 주식을 매집하여 매수주문과 매도주문을 체결시키면서 끌어올림. 만약 매도를 해서 이것을 1주씩, 1주씩 팔아 주문을 끌어 올리고 1주씩 체결한 가장매매라고 본 수량이 이렇게 나온 것임.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제2항에 허수매수는 거래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거래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제출한 후 반복적으로 취소하거나 정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이는 시장질서를 어지럽게 할 수 있기 때문임.

○ (위원) 금감원에서는 한국거래소에서 이 건을 통보 받은 것 인지?

- (보고자) 시세조종혐의로 통보를 받아 저희들이 시세조종혐의로 접근했다가 매매거래유인 목적이라든지 그런 법적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힘들다고 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적용하게 되었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63호 『□□□□□□ 우선주 주식에 대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 우선주 매매 당시 호가에 물량이 얼마나 쌓여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단일가매매 시간에 고가 주문을 제출하고 이를 취소했지만 저는 이것이 불공정거

라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고 왜 그랬는지 크게 3가지 이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고가주문을 제출하고 이를 취소하는 것을 매일 봐왔기 때문에 주식매매에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허용되는 사항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음. 그동안 주식을 하면서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보는 종목에서 단일가매매 시간에 상한가 가격에 대량의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하고 예상체결가를 상승시킨 후 취소하는 사람들을 바로 어제까지도 매일 봐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허용이 되는 사항인줄 알았고 이것이 불공정매매인지 전혀 저는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음. 두 번째, 과거 몇몇 종목에서 불공정거래 통보를 줬을 때 언제, 어떻게 매매를 해서 예상가관여 주문이 됐는지 정확한 매매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잘못된 매매부분이 어디인지 판단할 수가 없었음. 이번에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고 과거 매매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고 나서야 정확하게 알게 되었음.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면, 2019년 9월27일 ▼▼▼▼▼ 이후 통보를 받은 팝업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상가관여 주문으로 불공정거래에 해당되어 모니터링 되었으니입니다. 앞으로 매매함에 있어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8일 △△△△△△△△에서도 동일함. ‘예상가관여 주문으로 불공정거래에 해당되어 모니터링 되었으니입니다. 앞으로 매매함에 있어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12일 ☆☆☆☆☆ 내용도 동일함. ‘예상가관여 주문으로 불공정거래에 해당되어 모니터링 되었으니입니다. 앞으로 매매함에 있어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증권 HTS 팝업 아니면 전화통보를 받았는데 어떤 부분이 잘못된 매매인지 저는 전혀

알지 못한 채 팝업 확인창을 닫거나 전화통보 받게 되면
 “네. 주의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전부였음. 그런 다음 ‘유통
 주식에 없을 때 매매를 하게 되면 예상가관여 주문이
 되는구나.’ 하고 두루뭉술하게 다른 방향으로 스스로 판단
 할 수밖에 없었음. 그래서 과거 ★★증권과 통화할 때
 “유통주식수가 적은 데 제가 매매를 하면 예상가관여 주
 문이 뜬다. 유통주식수가 적은 종목은 매매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냐?”고 물어보기도 했음. 만약 ★★증권에서 예
 상가관여 주문으로 불공정 거래 통보를 줬을 때 매매했던
 시간과 수량만 함께 표시해서 알려줬더라면 저는 어느 부
 분이 매매에 있어서 잘못된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했을
 것이고 그 이후로는 절대로 이러한 활동을 하지 않았을 것
 임. 세 번째, 고가의 대량매수주문을 넣고 취소했을 때 예
 상가관여 주문으로 불공정거래 통보하는 기준이 어떠한
 상황에서는 허용이 되고 어떠한 상황에서는 허용이 안 되
 는지 그동안 저에게 명확한 판단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
 에 제가 옳은 판단을 할 수 없었음. ▼▼▼▼▼ 이후 매
 매내역을 지금에서야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니 2019년 9월
 26일 175만 원 밖에 안 되는 금액인 348주를 고가에 매수
 주문을 걸었다가 취소한 1건의 내역 때문에 예상가관여
 주문으로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하지만
 □□□□□ 우선주에서는 2020년 6월19일 99,720주를 고가
 주문 했다가 취소했었고 6월23일 43,217주를 고가에 주
 문했다가 취소했었고 6월25일 14,324주를 고가에 주문했
 다가 취소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에도
 ★★증권에서 예상가관여 주문으로 불공정거래 통보를 받
 지 않았음. □□□□□ 우선주 수 억 원을 매수했다가 취

소할 때는 ★★증권에서 불공정거래 통보를 전혀 받지 않았는데 ▼▼▼▼▼▼ 이후에 고작 175만 원의 소액을 매수하고 주문했다가 취소할 때 불공정거래 통보를 받은 것은 지금 봐도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음. 이런 이유들로 어떠한 상황에서는 허용이 되고 어떠한 상황에서는 허용이 안 되는지 그동안 저에게 명확한 판단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옳은 판단을 할 수가 없었음. 이상 3가지 이유로 인해 단일가매매시간에 고가매수 주문을 하고 취소하는 행위에 대해 불공정거래에 해당되는지 저는 몰랐었음. 끝으로 개인투자자인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예상가관여 주문으로 인해 증권사에서 개인에게 통보할 때는 매매했던 시간과 수량을 함께 표시해서 통보하여 개인투자자들이 어느 부분 매매에 있어서 잘못된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스스로 고칠 수 있게 하여 앞으로는 저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는 투자자가 또 다시 생기지 않길 바람.

- (위원) 금감원 보고서에 ‘단일가매매 시간에 대량의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하여 예상체결가를 상승시킨 후 이를 반복적으로 취소(5회 167,479주)하고, 장중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반복적으로 제출(8회 20,733주)하는 등’ 이렇게 나와 있음. 5회 167,479주, 8회 20,733주를 가지고 2,250만 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억울하고 이것은 처벌대상인지도 몰랐다는 얘기인지?

▶ (진술인) 맞음.

- (위원) 진술인이 궁금한 것이 첫 번째 반복적으로 취소한 5회와 체결가능성 희박한 호가를 반복적으로 제출한 8회, 이것이 핵심인데 금감원에서 볼 때 왜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인지를 진술인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자) 진술인의 매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6월15일에 이미 177,435주를 매수해 놓은 상황이었음. 이 주식을 매수해 놓은 상황에서 고가매수주문을 낸 후에 예상체결가격이 상승하자 이어서 취소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매매를 이어갔고 그 결과 이 종목에서 상당한 이익이 발생을 했음. 저희가 객관적인 매매데이터를 다 분석해서 봤을 때 A 진술인의 매매주문이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된다는 판단에 이르게 된 것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김에 ★★증권을 통한 주의, 경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서면이 되었던 구두로 되었던 경고를 주는 행위 자체가 자신의 고객에 대해서 경고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충분한 설명이나 또는 엄중한 뜻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음. 저희들이 증권회사로부터 받은 A 진술인에게 나간 여러 형태의 것들을 다 봤을 때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형태와 내용으로 경고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음.

- (위원) 진술인, 2019년 계좌개설 이후 10여차례에 걸쳐 ★★증권으로 부터 이상매매에 관한 경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 (진술인) 있었음.

- (위원) 그 뒤에도 경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 (진술인) 맞음.

- (위원) 시종가 단일가매매 시간에 정정·취소 관여율이 높아 예상체결가 및 체결량 형성에 관여했다는 내용의 경고를 5차례 받은 적이 있는지?

▶ (진술인) 그런적 있었음.

- (위원) 증권사에서 이런 것을 경고하는 것은 정정취소가 시세 조종. 즉, 주가조작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고하는 것임.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제2항에 보면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매매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해서 밑에 쪽 있음. 형벌은 고의가 있어야 되고 목적도 있어야 되는데 2014년 12월에 만들어진 이것은 고의도 필요 없고 목적도 필요 없고 행위만 하면 과징금으로 제재하겠다는 것임. ‘거래 성립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호가를 제출한 후 해당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해서 이 경우에도 제재하겠다는 것임. 금감원의 주장은 진술인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횡수가 적지만 문제가 있다는 것임. 횡수가 적은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보통주가 아니라 아마 우선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음. 이 법을 찾아보시면 본인이 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음.
- (위원) 위반사항에 적시된 것을 보면 장개시 전, 장마감 후

뿐만 아니라 장거래 시간 내에도 동일한 행위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장중에는 이러한 행위를 안 하셨는지?

▶ (진술인) 장중에 VI(Volatility Interruption) 걸렸을 때 저도 이 종목이 상한가 갈 것 같으면 매수를 걸고 뉴스를 찾아본 적이 있음.

○ (위원) 두 번째는 이상매매 경고가 ★★증권에서 10차례 정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술인 이야기는 이것이 어떤 종목인지를 몰랐다는 말씀인데 보다 정교한 정보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지?

▶ (진술인) 맞음.

○ (위원) 그렇다면 해당 일에 □□□□□ 우선주 외에 다른 종목도 고가매수한 다음에 취소한 종목들이 꽤 있으셨는지?

▶ (진술인) 제 기억으로 가끔 있었을 것 같음.

○ (위원) 본인이 □□□□□ 우선주가 아닌 다른 것이 많았기 때문에 경고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것이 □□□□□ 우선주인지 몰랐다고 말씀하셨음.

▶ (진술인) □□□□□에 경고가 안 왔음.

○ (위원) ★★증권에서 이상거래라고 경고가 왔는데 본인이 정확한 주식 종목명이 없어서 내가 어떤 종목인지 어떻게 알

겠느냐 하는 발언을 하셨음.

▶ (진술인) 종목명이 아니라 당일에 거래가 많음. □□□□
□ 우선주처럼 수 백 건의 거래를 했기때문임.

○ (위원) 손해 보셨다고 하셨는데 금감원 자료에 의하면 이익이
한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 (진술인) 의견진술서를 보면 저에게 제재하는 것이 6월19
일부터 6월25일까지 불법행위를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겠
다고 했는데 저는 19일 상한가에 거의 대부분을 매도했
음. 그다음 이후에 매매한 것을 가지고 저한테 불공정거
래라고 하셨는데, 그때부터 제가 수익이 난 것이 없음.

○ (위원) 그렇다면 10억 원의 수익이 난 것은 19일 이전이라는
것인지?

▶ (진술인) 그러함.

○ (위원) 왜 본인 명의가 아닌 형의 명의로 거래를 했는지?

▶ (진술인) 제가 과거 검찰 조사를 받았고 그로 인해 추징금
이 2억 원이 있었기때문에 제 계좌가 다 동결되어 사용할
수가 없었음.

○ (위원) 왜 2억 원의 추징을 당하셨는지?

▶ (진술인) 제가 카페에 글 올린 것이 400여종목인데 그중 수익이 난 20개만 뽑아서 저에게 과징금을 부과했음.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우선주 거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 (보고자) 2020년 6월경에 시장의 관심이 주로 우선주에 포커스가 맞추어지면서 평소와 달리 거래량이 급증하고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이 있었음. 특정한 종목이 아니라 우선주 전반에 걸쳐서 나타난 시장 현상이었음.

○ (위원) 취소 5회(167,479주), 제출 8회(20,733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5회가 아닌 3회, 8회가 아닌 5회가 되면 이것도 제재대상이 되는지?

- (보고자) 현재 법에 '대량으로'라는 표현만 있을 뿐, 시행령이나 그 외의 곳에서 특정해서 숫자로 객관화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음.

○ (위원) 금감원 내부 지침이 있는지?

- (보고자) 저희들이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양정할 때 쓰는 기준은 조사업무규정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들은 현재 매매분석을 통해서 실제로 그러한 주문이 당시의 주가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보고 시장 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위원) 오늘 결정이 되면 이것이 보도자료로 나가는지?

- (보고자) 맞음.

○ (위원) 이 사람의 경우에는 ★★증권에서 10회의 이상매매 경고를 받은 것이 고려되어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제재되는 것인지?

- (보고자) 사실 ★★증권에서 경고를 받았다는 것이 위반행위의 구성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정황으로써 말씀드리는 것이고 6월15일에 177,435주를 매수한 상태에서 6월19일부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되는 주문을 낸 사실이 있다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음. 진술인은 6월19일에 매도를 시도하면서 동시에 다른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문들을 제출하면서 매도한 사실이 있음.

○ (위원) 아무튼 이 건이 보도되면 이것을 관심 깊게 보시는 분들에게 감독당국의 시그널링(signaling) 효과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보고안건 제5호 『2020년도 하반기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를 상정하여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음.

○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접수함

□ 의결안건 제64호 『(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첫째는 前대표이사와 (주)○○○○ ○○○ 및 ○○○○○○○을 횡령혐의로 고발한 것 같음. 그와 관련하여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주)○○○○○○ 대표이사가 주주인 (주)○○○○○쪽의 ○○○○와 ○○○○○○○을 횡령혐의로 고발했는데 주원인은 무엇인지?

- (보고자) 원인은 ○○○가 퇴임하기 직전에 회계분식이 발견되었음. 그런 얘기를 듣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니 ○○○가 퇴직금을 달라고 하여 분쟁이 시작되고 이것이 소송전으로 비화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리고 수사 마무리 단계로 아직 기소는 되지 않았고 민사소송에서는 ○○○ 청구소송이 일부 받아들여졌고 한편으로는 ○○○도 일부 성과금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반환의무를 판결한 것으로 알고 있음. 종합적으로 회사가 ○○○에게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임. 나머지 사항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임.

○ (위원)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이 2017년에만 과소계상액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2015년~2017년까지 유사한 금액이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으로 적시되어 있고 다만 2017년의 경

우에는 금감원이 설명하신 것처럼 퇴직문제 등 그러한 의도 때문에 ‘고의’가 된 것인지? 결국 실질은 동일한데 2017년의 경우에는 ○○○이라는 분이 퇴직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아 ‘고의’로 판단하셨는지?

- (보고자) 사실 2016년까지는 회계부장이 대표이사한테 분식 사실을 보고한 증거를 저희가 못 찾았음. 다만, 2017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해서 저희가 ‘고의’로 판정한 것은 2018년 1월29일에 장부상 총당금을 16억 원 쌓았는데 필요한 것은 29억 원이라고 해서 한 13억 원 정도 부족하다고 보고된 바가 있고 또 2018년 2월19일에는 장부상 16억 원이고 필요한 것은 31억 원이라고 해서 15억 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한테 보고하고 ○○○이 저희 주장으로는 ‘31억 원 이하’ 이렇게 자필로 했는데 본인은 그 사실을 부인합니다마는 저희는 ○○○의 자필이 맞다고 보임. 저희는 그런 두 가지 증거를 가지고 최소한 2017년에는 이미 보고가 되었고 ○○○이 바로 회계처리를 했어야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음.
- (위원) 그것은 금감원의 생각이고 진술서와 대리인이 쓴 의견서를 보면 이 사람은 잘 모르고, 원인행위는 ○○○라는 회계부장이 전부다 이 일을 도모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의 경우에는 ○○○한테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씨 이야기는 실제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되는 금액과 적립하지 않은 금액의 차이에 대해서 첫 번째는 언론사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체와는 달라서 대손충당금을 쌓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이유 하나와 두 번째는 3년, 5년, 10년 장기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

적립하는 부분의 상이점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유를 들어 상관없다고 ○○○이 이야기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임. 그러니까 금감원에서 적시한 것은 ○○○이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사실을 두 차례나 보고를 받고 올바른 대손충당금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 ‘고의’사항인데 ○○○의 이야기와 범무법인 대리인의 의견서는 정확한 대손충당금을 얼마 쌓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고 결국에는 15억 원 또는 회계법인까지 와서 2억 원만 더 쌓으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적립했다는 의미로 적시하고 있음. 그래서 금감원이 지적한 사항과 실제 사항이 조금 다른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자) 우선, ○○○씨는 (주)○○○○ 회계를 권장하는 기획부장 출신이고 매월 경영실적 관련사항을 (주)○○○○ ○○○을 독대해서 보고했음. 그러면 회계처리내용을 모를 수 없음. 다만, 그 보고과정에서 ○○○ 사장이 좀 불편한 태도를 취한 것 같음. 그러다 보니 그 이후 ○○○ 부장이 최종적으로 2018년 2월19일에 “정말 부족한 것은 31억 원이고 15억 원을 추가해야 합니다.”라고 하니까 ○○○이 “31억 원이야.” 이렇게 하면서 31억 원을 썼다고 주장함. 저희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은 다 보고했다고 하고, 또 하나는 외부감사가 2월9일에 끝났는데 그 이후에 3개의 주요부서장을 소환해서 “충당금 제대로 가지고 와 봐.” 이렇게 지시함. 그런 정황을 봤을 때 ○○○은 최소한 감사보고서 발행 전에 회계분식이 있었다는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

- (보고자) 2018년 1월29일에 ○○○이 ○○○에게 13억 원이 대손충당금 부족하다는 보고를 하고 2월5일에 ○○○가 ○○○에게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을 통해서 흑자를 내 왔다고 오해를 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고 얘기를 함. 이 말을 듣고 ○○○이 2월6일에 연령분석을 다시 해서 1억 6,000만 원 부족하다고 축소보고를 함. 그리고 그 축소보고된 대손충당금을 가지고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마침. 여기에서 ○○○의 태도인데 보통의 CEO라면 외부감사를 거친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신뢰를 가질 텐데 ○○○가 2월12일에 각 부서의 부서장들을 불러 놓고 “채권조사를 다시 하라” 하고 “회계기준 대손충당금이 적정한지 부족한지 다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림. 그래서 이 지시사항에 따라서 2월19일에 회계기준으로 15억 원이 부족하다고 보고를 하고 그것을 ○○○가 31억 원을 수기로 표시한 것인데 ○○○는 그 부분에 대해서, 2월19일에 보고를 못 받았다고 부인하는 것인데 통상의 CEO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 대손충당금이 적게 계상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하는 것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의’로 본 것임.

○ (위원) 지금 동일한 이야기에 대해서 ○○○는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음. ○○○의 얘기는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째 째해서 회계감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3개의 부서에 대해서 다시 재조사를 시켰다,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완전히 정반대의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서 그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람.

- (보고자) 그러면 ○○○가 2월12일에 회계기준 대손충당금을

다시 재보고해 달라고 지시했으면 그 재보고 지시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을 것임. 저희는 그것이 2월19일 수기로 표시한 31억 원을 대손충당금 최종금액으로 보는 것인데 ○○○는 그 부분 보고를 못 받았다고 부인하는 것임. 보고를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보고를 했을 것이고 저희는 2월19일에 보고를 했다고 보는 것임.

○ (위원) 법률대리인이 작성한 의견서를 보면 대손충당금 자료는 2018년 2월19일에 피조사자에게 보고된 것이 아니라고 함. 왜냐하면 퇴임한 이후에도 여전히 14억 원 상당의 대손충당금 적립이 안 된 것을 보면 이 대손충당금 자료가 2월19일에 본인에게 보고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함. 그러니까 2월19일에 대손충당금 자료를 정확하게 ○○○에게 보고한 증거가 있는지?

- (보고자) ○○○ 부장이 총 31억 원의 대손충당금이 필요하다는 수기의 표시 글자들이 다른 문서의 ○○○가 표시한 버릇과 똑같음.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도 회사의 주장이 조금 더 신빙성 있다고 봤고 ○○○는 모든 부분을 다 녹취했는데 본인이 불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녹취록을 제출하지 않고 있음. 그다음에 저희가 확증적으로 보는 것은 2월9일에 외부감사가 끝나서 대손충당금 재무제표가 확정되면 보통의 CEO라면 “우리 재무제표가 외부감사인인 검증을 거친 결과 이렇구나,” 하고 거기에서 끝남. 그런데 ○○○ 같은 경우에는 외부감사는 외부감사대로 끝내 놓고 실제 대손충당금을 얼마 적립해야 되는 것인가를 다시 부하 직원들한테 지시를 내린 것임. 그러면 그 지시를 내린 다음에 재보

고해 달라고 했는데 그 보고를 못 받았다는 주장이 저희는 맞지 않다고 본 것임. 저희는 2월19일에 보고한 것으로 본 것임.

- (위원) 지금 민사사건에서 ○○○씨가 2018년 2월6일에 대손충당금 설정을 위한 연령분석에서 3년 이상 채권액 등을 임의로 대폭 조작·감액하여 피조사자에게 보고한 것은 ○○○ 스스로 작성한 것이 맞다고 인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과 2월19일 보고내용은 관련성을 굳이 따질 필요가 있는지?

- (보고자) ○○○씨가 ○○○씨한테 2번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음. 1차 보고가 2018년 1월29일로 이때는 회사는 16억 원으로 설정했는데 29억 원이 필요하다는 1차 보고를 했고 이 부분도 ○○○가 부인하지 않음. 태도 등을 감안하여 ○○○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 2월9일에 외부감사를 종료하고 그 이후 2월12일에 광고국, 인터넷마케팅, 투자마케팅 부서 등 3개 부서를 대상으로 ○○○가 대손충당금 재조사를 지시함. 그 결과 보고한 것이 저희는 2월19일자 15억 원을 더 해야 된다는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지시해 놓고 본인은 보고 받은 것이 없다고 하고, 그렇다면 녹취록을 다 가지고 있는데 2월19일자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이 날짜만 없다는 것임. 그래서 저희는 ○○○의 진술을 신뢰하지 않고 있음.

- (위원) ○○○이 뜬금없이 2015년, 2016년은 모르고 있다가 2017년 결산업무 수행 시 동종업계의 회계처리 관행 및 ○○○ 회계팀에 확인 후 기존 연령분류표 작성방법이 틀렸

다는 사실을 파악하였고, 저는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 갑자기 2017년 그것도 1월29일, 회계감사가 2월9일에 종료되는데 한 10일 정도 남기고 대손충당금 이렇다고 얘기하면 어느 대표이사가 격노를 안 하겠는지? 저는 날짜별로 흘러가는 흐름을 쫓 보면서 ○○○이 계속 이런저런 얘기를 함. ○○○이 대손충당금 설정기준이 회사마다 상이하다고 설명하자, ○○○는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으로 흑자를 내게 했다는 오해를 받으면 안 된다고 언급했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에 대한 신뢰관계가 상실됐기 때문에 3개 부서를 소집함. 거기에서 나오는 자료들 내용과 ○○○의 얘기가 상호일치하지 않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지게 됨. ○○○도 왔다 갔다 하고 현업 부서 3개 부서에서 매출채권내역과 연령 분석을 어디까지 시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뢰할만한 정보를 얻을 수 없으니까 당장 조치를 못하는 것임. 저는 개인적으로 고의분식으로 가게 된 주책임자는 ○○○인 거 같음.

- (위원) 저는 ○○○도 이런 사건을 유발한 사람으로 검찰에 통보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런 경우에 과연 대표이사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겠는지? 현업부서도 5개인데 소집을 하고 구정이 중간에 끼어서 2월19일에 받았는데 현업부서의 자료도 상호 일치되지 않아서 계속 조사를 시키고, 그리고 이후 3월27일에 그만 두면서 CEO에게 업무인수인계를 했다고 함.
- (위원) 이것을 보면서 그렇다면 모든 책임을 대표이사가 부담해야 하는가, 상응하는 책임을 ○○○도 같이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닌지?

- (보고자) 보통은 임원이나 대표이사를 함. 담당자를 하는 경우에는 담당자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한 경우 주로 검찰고발로 통보해 왔음. 그러다 보니 ○○○가 회계분식을 주도적으로 한 것은 맞지만, 그런 정황이 발견이 안 되어서 대표이사만 통보 대상에 넣어놓은 것임.
- (보고자) 그리고 보충하자면 저희도 ○○○를 볼 때 잘못된 보고를 대표이사에게 한 부분이 충분히 인정은 됨. 그런데 ○○○가 2018년 1월29일에 최초로 대표이사에게 보고 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회계분식을 숨기고자 보고 했다가보다는 2015년, 2016년에 본인이 잘못된 것이 스스로 파악이 됐으니까 대표이사에게 충당금이 다르다는 부분을 보고한 것임. 본인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은폐하려는 것과는 유인이 다르다고 보고, 저희가 고의로 판단하는 것의 핵심은 연령분류표를 조작한 것인데 ○○○이 제출한 녹취록 세 군데에서 ○○○이 대손충당금 연령분류를 해서 작성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옴.
- (위원) 어쨌든 ○○○의 진술이기는 하지만 ○○○는 ○○○이 본인 기준에 따라 적정한 대손충당금을 스스로 재계산해왔을 개연성이 있는 것 같음.
- (위원) 이후 대표이사한테도 그러한 사실을 인수인계 한 것은 사실인지?

- (보고자) 인수인계에 대해서는 양쪽 주장이 서로 상반되고 있음.
- (위원) 2월27일에 인수인계 했다고 하고, 1/4분기 때 왜 바로 공시를 안 했는지?
- (보고자) ○○회계법인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파악하느라고 2분기 때 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원) 검찰에 통보한 사례가 어떤 경우인지?
- (보고자) 직원인 경우 저희가 통보한 사례는 직원이 분식회계 관련해서 횡령·배임이라든지, 거기에 참여를 해서 본인이 어떤 특정이득을 얻은 경우, 최근 ○○○○ 건의 경우에도 경리부 차장이 개인계좌로 회사 자금을 수령한 내역이 확인된 사실이 있어서 같이 검찰통보를 한 사례가 있음.
- (참여자) 5월17일이라면 회계감리 들어가기 한참 전에 녹취가 된 내용인데 그때 문제가 되어서 서로 대화를 나눈 것을 녹취했으면 2월19일 보고내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언급을 했었어야 되는데 언급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2월19일에 실제로 그것이 보고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의 입장에서서는 다툼을 하실 것 같음.
- (보고자) 감리위 끝나고 감리반이 다시 한 번 ○○○와 접촉을 했는데 ○○○는 공모한 것이 맞고 31억 원은 ○○○의 자필이 맞다고 진술하고 있음.

- (위원) 2월19일 외상매출금 부서장 의견 보고 문건은 실제로 3개 부서한테 조사를 시켰는데 5개 부서 것이 되어 있는데, 3개 부서장들이나 제3자의 진술도 한번 들어보셨는지?
- (보고자) 부서장들이 ○○○에게 2월12일에 이 내용을 다 보고했고 이 내용을 ○○○이 ○○○에게 서면으로 보고했음. 그리고 각 부서장들은 연령분류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다른 부서장들은 이 내용을 모르고 있음.
- (보고자) 독대했기 때문에 증언할만한 부서장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원) 지금 이 사례를 보면 대표이사가 어떻게 행위를 하는 것이 맞는지? ○○○도 이것에 맞는 책임을 져야 됨. 거의 회계임원에 준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여서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두 사람을 다 통보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근거를 찾을 수 있다면 찾아서 통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음.
- (보고자) ○○○가 분식회계를 주도적으로 한 것은 맞음.
- (위원) 주도적으로 한 것은 가장 형사책임이 큰 사람임. ○○○는 행위책임으로 해서 검찰통보를 해야 됩니다.
- (보고자) 임원도 아니고 본인이나 제3자 이익을 위해서 특별히 행동을 한 것도 안 보이니 대표이사만 통보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임. 다만, 사업보고서에 신고담당자가 ○○○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보도 가능하고 법적으로 문제는 없음.

○ 보류하는 것에 동의함

⇒ 보류함

□ 의결안건 제65호 『(주)○○○○○○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 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회사는 본건 조치내용 중 과징금, 과태료, 감사인 지정 등에 대해서는 조치를 수용할 수 있으나 검찰고발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회사 종속기업투자주식 회계처리의 경위는 회사가 (주)○○○○○○에 9억 원을 투자한 거래로 인한 부분임. 회사는 2015년 결산시 상대 회사의 계약서를 요청하여 거래의 실재성을 확인하고 담보에 대한 공정가액을 확인하고 손상처리를 하지 않았음. 2016년 결산시에는 담보로 제공된 펀드의 환매가 불가능함을 확인하고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손상처리를 하였음. 기타 금융자산 회계처리의 경위는 회사가 (주)○○○○○○ BW에 5억 원을 투자한 거래로 인한 부분임. 회사는 2015년 결산시 상대회사의 재무제표, 사채인수계약서 등을 요청 및 확인하고 사업초기인 점과 조기상환일을 고려하여 손상징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2016년 결산시에는 상환이 없었고 재무제표도 수령하지 못하여 손상처리를 하였음. 기타보증금 회계처리의 경위는 회사가 실사보증금으로 (주)○○○○○○○○○○에 7억 원을 지급한 거

래로 인한 부분임. 회사는 실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회수 노력을 하였고 2015년, 2016년 결산시에는 회수가 되고 있어서 미회수 부분의 손상을 고려하지 못하였음. 2017년에는 회수가 되지 않아서 잔액을 손상처리 하였음. 위법동기를 양정기준상 고의는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위법행위를 한 경우로 정의되어 있는데 이는 재무제표 작성시에 행위자의 입장에서 인식과 행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재무제표 작성 시점에 재무팀이 독자적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던 것이므로 재무팀의 입장에서 판단 받아야 함. 본건 위법동기의 고의 근거는 양정기준상 위법행위가 임직원의 횡령과 관련된 경우인데 위법행위는 회계기준 위반행위를 말하고 횡령과 관련된 경우는 그 관련성이 실질적이어야 한다고 생각됨. 본건은 재무팀이 회수 가능성과 손상검토를 소홀히 한 주의의무 위반이 원인이므로 재무팀의 중과실로 판단 받아야 타당함. 회사의 입장은 본건 위법동기를 고의로 판단하시더라도 여러 사정을 감안하시어 고발조치를 제외해 달라는 것임. 먼저, 고발취지가 형사처벌을 통해 회계기준 위반행위를 엄벌하는 것인데 같은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없거나 다른 조치로도 제재효과가 충분한 경우에는 고발의 필요성이 약하다고 생각됨. 회사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검찰수사가 있었다는 것이 회사의 입장임. 회사의 ERP 시스템 전체, 5년치 거래원장 및 전표에 대해 검찰의 압수가 있었고 출석조사시 회계처리에 대한 질문도 상당하였음. 현재는 지적사항이 모두 해소되었는데 前대표이사 재직 시에 발생한 위반사항의 조치를 바뀐 경영진이 수용해야 하는 상황임. 고발조치가 있으면 회사에 대

해 매매거래정지와 상장실질심사가 있게 된다는 점이 회사로서는 뼈아픈 부분임. 회사는 ○○○의 횡령 사실로 1년간 매매거래가 정지되었고 개선에 최선을 다하여 상장유지 결정을 받은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았음. 그럼에도 본건 고발조치로 6개월만에 다시 상장실질심사의 대상이 된다면 오히려 투자자보호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임. 또한, 前대표이사 관련 사항으로 부과되는 과징금, 과태료, 금전적 제재가 상당하고 3년간 지정감사인의 보수를 생각하면 제재효과가 충분하다고 생각됨. 회사는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위법동기를 중과실로 주장하고 있으나 고의로 판단하시더라도 고발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고발조치를 제외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림.

- (위원) 결국 위반사실은 인정하지만 위반동기가 ‘고의’가 아니라는 주장이신 것 같고, 그래서 회계위반사항이 종속기업 투자주식 과대계상으로 기타보증금, 기타금융자산, 종속기업투자주식 이 세 건에 대해서 위반은 맞지만 ○○○씨가 지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의’가 아니라는 주장이신지?

▶ (진술인) 그러함.

- (위원)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면 결국 ○○○씨가 기타보증금의 실사약정보증금 7억 원을 (주)○○○○○○○○에 지급하고 그리고 1억 9,600만 원을 되돌려 받는 것이 이미 1심에서 판결이 났음. 그런데 이렇게 돈을 돌려받았는데 어떤 근거로 회계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종속기업투자주식이나

기타금융자산이나 기타보증금에 대해서 ○○○씨의 지시가 없었다는 것을 확신하시는지?

- ▶ (진술인) ○○○이 1억 9,600만 원을 돌려받는 것이 ○○○ 개인계좌로 돌려받은 것인지는 판결문상으로 명확하지 않음. 하지만 그때 당시 CFO나 재무팀장은 ○○○의 지시로 자금집행까지는 하였지만 거래와 ○○○이 어떠한 동기로, 언제부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시하고 그 이후에 집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실무팀에서는 모름. 다음으로 회계처리는 결산재무제표에 반영되는데 결산재무제표 작성 당시 시점에는 ○○○은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었고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회계처리에 대한 지시는 없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임. 물론 ○○○이 대표이사로서 서명한 부분은 있지만 그 회계처리를 지시하거나 내용을 인식하고 서명했다고 실무진들은 생각하지 않고 있음.
- (위원) 그런데 엄한 곳에 투자하고, 결국 그 투자금을 (주)○○○○○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한테 8억 원을 또 단기대여하고 이것이 과연 ○○○씨가 큰 그림을 그리지 않고 이런 행위를 하겠는지?
- ▶ (진술인) 당시의 CFO나 회계팀장들이 검찰수사를 받으면서 만약 그러한 지시를 알았다면 적어도 방조 이상의 공모혐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렇게 기소되었을 것으로 생각됨.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한 가지 확인하면 오래 전에 前대표이사 횡령·배임 공사와 관련해서 실질심사를 받아 매매거래정지가 되었는지?
 - (보고자) 맞음. 후속경영진들이 바뀌는 이런 것들도 회사 정상화 노력을 고려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의 행태를 봤을 때 정말 회사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는 것임.
- (위원) 본 건은 이미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았지만 형태가 새로 들어온 경영진들도 무자본 M&A라고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매거래가 정지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어서 검찰고발로 가야 되겠다는 금감원의 원안 그리고 감리위 원안에 저는 동의를 하는 바임.
- (위원) 저도 이 회사는 조금, 뒤에 CB를 발행한 내역을 보면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감원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임.
- (위원) 감리위 의견은 어떻게 심의된 것인지?
- (위원) 원안대로 의결을 했고, 이 건에서도 회사가 일단 임직원의 횡령·배임과 관계되면 여지없이 고의 I 단계로 가는 것이고, ‘고의 I 단계’면 당연히 검찰고발이 되는 것인데 상장실질 심사 이미 받았다, 검찰 수사 받았다, 이미 과징금이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우리는 다 인정할 테니 검찰고발만 빼 달라는 식으로 들어오면 그동안의 양정 기준이라든지 조치라는 것들이 모두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접근하도록 놔둘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향후 고의 단계에서 검찰고발이나 통보를 업무정보송부로 갈음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명확한 기준을 차제에 마련해 두는 것이 좋겠다고 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함께 부탁드렸던 기억이 남.

- (참여자) 원칙은 지켜가되, 예외적으로 정말 우리가 정상 참작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거기에 해당하면 개별적으로 예외를 인정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임. 이 건에 대해서는 정상관계를 충분히 받아줄만한 상황인 것인지를 봐야 될 것 같음.
- (위원) 사실 전형적인 무자본 M&A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므로 본 회사의 경우에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66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전에 시행령 보고하실 때 금투업 규정에 위임하셨던 것을 구체화 시킨 것인지?

- (보고자) 맞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67호 『(주)골든브릿지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오늘 증선위에서 승인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 (보고자) (주)골든브릿지자산운용의 필요유지 자기자본이 감소하게 되는 것임.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1년도 증권선물위원회 제5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9시08분 폐회)